

2024년  
VOL.1

# KIPA 정부혁신 트렌드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부혁신 해외 사례

🇯🇵 일본과 🇦🇺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우하린 부연구위원

김정해 실장

송방현 연구보조원



#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부혁신 해외 사례



일본과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우하린 부연구위원 | 김정해 실장 | 송방현 연구보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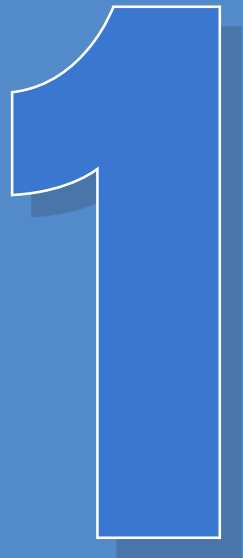
---

##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부혁신 해외 사례

일본과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

# 서론



## ●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 ●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 심화<sup>1)</sup>

- 통계청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4년만 해도 합계출산율은 1.205였으나, 2018년 처음으로 0.977이 되었고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0로 세계 최저 수준임
- 출생아 수는 2014년 435,435명에서 2023년 230,000명으로 10년 만에 1/2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음

### ● 생산연령인구수 감소 및 고령화 심화

- 생산연령인구수(15~64세)도 2014년 37,256,000명에서 2023년 36,572,000명으로 감소함
- 65세 이상 인구수의 경우 2014년 6,277,000명에서 2023년 9,436,000으로 증가함.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14년 12.4%에서 2023년 18.2%로 급증하였음

## ● 인구감소에 따른 정책 난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대응 필요

###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 교육, 치안, 국방, 복지 등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

- 인구감소는 대표적인 정책 난제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경쟁력 감소, 국방력 저하, 지방소멸 등에 이르기까지 문제의 심각성과 파급력은 매우 큼

### ● 인구감소로 인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 필요

-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을 개선과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
- 실천과제로 지방거점도시혁신도시 설정, 농산어촌 이주 및 정착지원 정책 마련, 교통 불편 해소,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을 설정

### ● 2024년 정부혁신추진계획에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전략 3)’의 세부 과제로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일상화 된 위기·위험 대응을 추진 예정



1) 국가통계 포털. (n.d.).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자연증가 등.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1&vw\\_cd=MT\\_ZTITLE&list\\_id=A2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1&vw_cd=MT_ZTITLE&list_id=A2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검색일: 2024.4.19.)

## ● 인구감소 문제를 먼저 경험한 해외 사례 연구 필요

### ● 인구감소로 인한 정책 난제 해결을 위한 주요국의 경험과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해결 대안 모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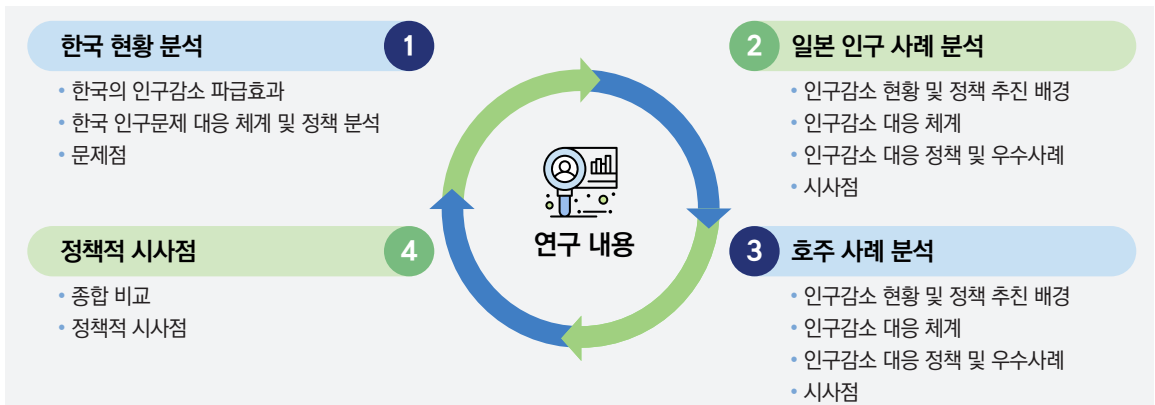
- 1960년대 이후 유럽 대부분 국가의 출산율은 2.0명 수준 이하로 낮아졌으나 프랑스와 스웨덴은 보육수당 지급, 일하는 방식 변화, 사회문화 개선, 보육 및 교육 구조 개선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함
-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일본은 1990년대부터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을 수립해 왔으며, 2010년대 중반부터는 지방 마을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추진함
- 호주의 경우, 자연증가보다는 해외 이민자 유입을 통한 인구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통폐합을 통한 효율적 규모의 지방정부 운영,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주-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정부협의체(COAG,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를 구성하고 운영함

## ● 연구 목적 및 내용

### ● 본 연구는 일본 및 호주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혁신 및 대응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 정부에 적용 가능한 정책과 대안에 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책 난제로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 주요국의 정부혁신 수단과 방법에 중점을 두고 한국 정부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필요

- 정책 난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통합적 접근방식과 거버넌스 접근 방식을 들 수 있음
- 일본 사례는 내각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의 통합적 접근방식을 추진한 대표 사례임
- 호주 사례는 정책 난제를 거버넌스 차원에서 대응한 방식을 추진함
-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과 호주 사례를 선정하여 인구문제의 이슈, 대응 정책 등을 분석함. 단 구체적인 정책내용보다는 전략, 계획, 세부 정책 과제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해외 주요국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한국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그림 11 연구 내용



출처: 저자 작성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부혁신 해외 사례

일본과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의 인구감소 대응 현황분석



## 1. 인구감소에 따른 파급효과

### ● 인구감소로 인한 주요 이슈와 파급효과

#### ● 인구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문제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지님

- 인구 문제는 변화가 빈번하고(가변성), 미래 예측이 어려워 정책결정이 힘들며(불확실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고(복잡성), 문제를 정의하기 어려운(모호성) 정책난제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파생되는 모든 이슈에 대한 파급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려움
- 이에 따라 대표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시하고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함

그림 21 인구감소에 따른 주요 이슈와 파급 효과



출처: 저자 작성.

### ●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공급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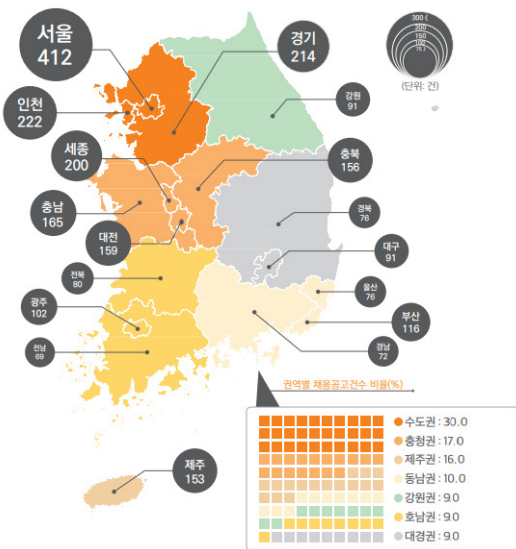
#### ● 인구감소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의미하며,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노동공급의 감소로 연결됨

- 2010년 생산연령인구 중 15~24세의 비율은 13.3%, 25~49세는 41.7%, 50~64세는 18.1%였으며 2023년에는 10.2%, 35.7%, 24.9%로 50~64세 비중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
- 2030년에는 각각 8.7%, 31.8%, 24.2%로, 2060년에는 6.8%, 21.4%, 19.8%로 절대적인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됨<sup>2)</sup>
- 총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3,763만명 이후 매년 3~4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총 인구수 감소와 더불어 청소년과 청년·장년층의 감소 폭이 큼(오수진, 2023: 2; 성창훈, 2022: 60~61)

2) 통계청. (n.d.).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생산연령인구, 고령인구 등).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3&nn\\_path=1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3&nn_path=13) (검색일: 2024.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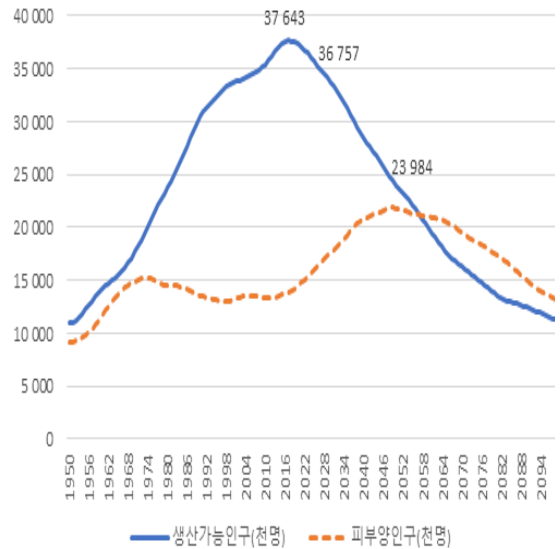
- 국제기구의 전망에 따르면 한국이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감소하고, 노동해서 세금을 내는 인구 수가 줄어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경고하고 있음<sup>3)</sup>
- 한편 1966년 이후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속화되고 있음. 2022년 10월 기준 광역권별 청년인구당 채용공고 건수는 수도권이 30.0%, 충청권이 17.0%로 조사되고 있으며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지방소멸의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그림 3 | 시도별 청년인구 만명 당 채용공고 건수(2022년 10월 기준)



출처: 하수정 외. (2022: 7)

그림 4 | UN의 한국 생산가능인구, 피부양인구 변화 전망



출처: 유진성. (2023: 1).

##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위기와 장기 불황

-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 국가경쟁력 하락, 산업구조의 재배치 필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위기나 장기불황 발생이 우려됨
- 2023년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은 약 0.59% 줄어들고, 피부양인구가 1% 증가하면 국내총생산은 약 0.17%가 감소함<sup>4)</sup>
-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저출산으로 육아활동에

3) 조선일보. (2011년 11월 9일자). "생산가능인구 감소도 겹쳐... 점점 쪼그라드는 한국경제."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11/09/REDYBRQYBJFAPH445DR5GCIDDM/](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11/09/REDYBRQYBJFAPH445DR5GCIDDM/) (검색일: 2024.3. 29.)

4) 한국경제연구원. (2023년 9월 2일자). 보도자료: 생산가능인구 1% 감소하면 GDP는 약 0.59% 줄어든다. <https://www.keri.org/forum/press-release/2023-05-18-saengsanganeungingu-1-gamsohamyeon-gdpneun-yag-0-59-juleodeunda> (검색일: 2024.3. 29.)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 수요가 줄어들며, 고령층 비중이 늘어나면서 소비시장 전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짐<sup>5)</sup>

- 일본의 경우 생산가능인구감소가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이 되었는데, 도요타 자동차의 일본 내 판매량이 1990년 250만대에서 2010년 156만대로 38% 감소하였음
- 한국의 인구감소가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 한국의 산업 전반에 걸쳐 이와 비슷한 위기가 올 것으로 전망됨<sup>6)</sup>

##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체계 및 재정개혁 필요

- **(교육)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증가, 교원 수 조정, 교육재정체계 재정비 필요성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 교육 제도의 적합성이 저하됨<sup>7)</sup>**
  -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관찰되고 있으며, 2023년의 학령인구는 7,302,000명에서 2027년에는 6,610,000명으로 69만 2천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sup>8)</sup>
  - 이처럼 전체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가정과 이민자 대상 정책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임
  -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신입교사 채용 규모가 줄어들어 2022년도에는 초등 임용시험 합격률이 50% 아래로 하락하면서 교대정원 및 교사 정원 감축 등이 추진되고 있음<sup>9)</sup>



5) 한국경제. (2019년 4월 8일자).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소비 줄어 경제활력 떨어져.”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19040535361>(검색일: 2024.3. 29.)

6) 머니투데이. (2020년 10월 23일자). “인구감소는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킬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2210594257234> (검색일: 2024.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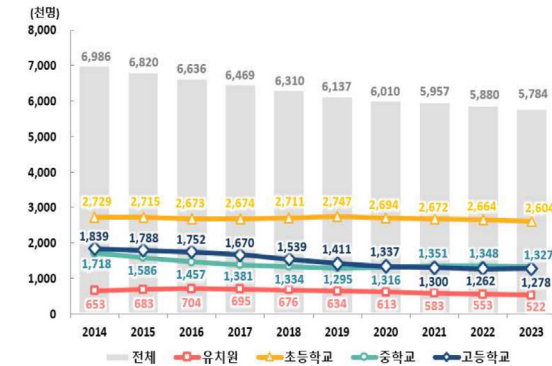
7) 충청투데이. (2023년 1월 19일자).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편중 심화.”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637> (검색일: 2024.3.12.)

연합뉴스. (2022년 1월 13일자). “초중고 학령인구 가파르게 감소…2026년에는 500만명 아래로.”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3108700530> (검색일: 2024.3.12.)

8) 국가통계포털. (n.d.).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생산연령인구, 고령인구 등) / 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3&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3&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검색일: 2024.3.12.)

9) 경향신문. (2023년 4월 23일자) “‘교대 나오면 임용 보장’ 옛말…학령인구 감소에 초등 임용 합격률 50% 아래로”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4231517001#c2b> (검색일: 2024.3.12.)

그림 5 | 2023년 8월기준 전체 학생 수(단위: 천명)



출처: 교육부, (2023: 2).

그림 6 | 2023년 8월기준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수(단위: 명)



출처: 교육부, (2023: 5).

##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및 수도권 쏠림

### 인구가 감소함과 동시에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

- 지방의 경우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감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유출에 따른 지역주민 감소로 지역 내 소비산업의 수요 붕괴, 가옥 및 상공업시설 공동화현상 발생,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수준 감소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지수 0.5 미만 지역)은 2021년 기준 108개로 전체 228개 시군구의 절반정도에서 2023년 2월 기준 118곳(52%)으로 과반수를 넘게 됨(성창훈, 2022: 61; 이상호 · 이나경, 2023: 112)
- 특히 2023년에는 소멸위험지수 값이 0.2 미만인 소멸고위험지역이 51곳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지역 기반시설의 운영지속성 감소, 건강·복지 등 기본권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성 저하 등이 발생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이상호 · 이나경, 2023: 112)
- 전문가들은 지방소멸로 인해 지역경제 기반 위축, 정주기반 와해, 지방 주민 삶의 질 저하, 인프라 이용이 취약한 생활사막 증가, 지방재정 취약 및 지방 자립 기반 저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차미숙, 2024)

그림 7 | 시도별 소멸위험지역 시군구 분포

(단위 :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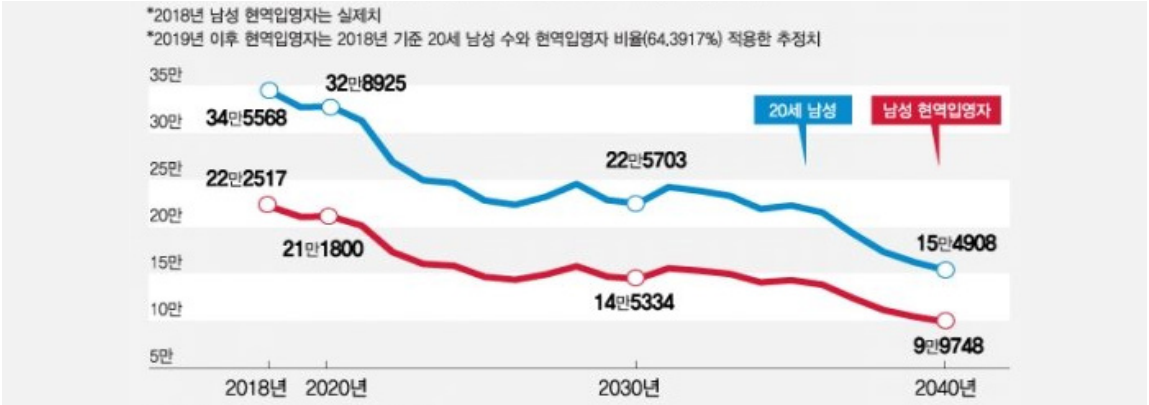
|           | 전국   | 부산   | 대구 | 인천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
| 전체 시군구 수  | 228  | 16   | 8  | 10 | 31   | 118  | 11   | 15   | 14   | 22   | 23   | 18   |
| 소멸위험진입    | 67   | 7    | 2  | 2  | 6    | 12   | 3    | 7    | 6    | 7    | 10   | 5    |
| 소멸고위험     | 51   |      |    | 1  |      | 4    | 5    | 5    | 7    | 11   | 10   | 8    |
| 소멸위험지역 소계 | 118  | 7    | 2  | 3  | 6    | 16   | 8    | 12   | 13   | 18   | 20   | 13   |
| 소멸위험지역 비중 | 51.8 | 43.8 | 25 | 30 | 19.4 | 88.9 | 72.7 | 80.0 | 92.9 | 81.8 | 87.0 | 72.2 |

출처: 이상호 · 이나경. (2023: 113).

●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국방력 저하

- 병역자원은 2020년 33만명, 2027년에는 24만명으로 2020년 대비 1/4 이상의 병역자원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김신숙, 2023: 12-13)
- 병무통계연보의 남성 현역입영자 감소 추정치를 보면 2020년 기준 21만명 정도에서 2030년 15만명 정도, 2040년에는 10만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 인구감소와 남성 현역입영자 감소 추이 추정치(단위 : 명)



출처: 머니투데이. (2019년 12월 10일자). “20년 후 군입대 남성 15만명…국방력마저 위협하는 인구감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0611233848602> (검색일: 2024.4.2.)

- 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북한군의 단독 전쟁 시나리오별 필요 상비병력인 4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현역병은 21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현재 현역병의 수가 최소 필요 현역병 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 저하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sup>10)</sup>

10) 한국경제. (2022년 9월 6일자). “韓, 인구감소로 북합위기…의료·교육·국방·도시정책 모두 바꿔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90525731> (검색일: 2024.3.21.)

## ● 빈집 증가에 따른 치안 공백과 범죄율 증가

###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따른 빈집의 증가는 방범 환경의 변화 및 범죄율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sup>11)</sup>

- 2022년 기준, 도시지역 내 4만 2천여호, 농어촌지역 내 9만호가 빈집으로 추산되며, 그 절반에 해당하는 6만 천호 정도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됨. 빈집의 면적은 전국 127.03km<sup>2</sup>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4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sup>12)</sup>
- 최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부산과 광주 단 2곳만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빈집 정비를 위한 예산확보 수준의 차이도 발생하고 있음
- 빈집 조사를 위한 기준과 통계가 각 기관별로 상이함. 2021년 기준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취합한 빈집은 전국 10만 5,084호였으나, 통계청의 조사에서는 139만 5,256호로 나타나 서로 약 1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 소멸지역인 농촌지역에서는 치안수요가 줄어 파출소 통합이 추진 중이나 빈집으로 인한 범죄발생 가능성은 높아질 우려가 있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음<sup>13)</sup>

## ● 인구감소 이슈를 풀어나가기 위한 방향성

- 인구감소 현상은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고 훨씬 복잡하게 얽혀져 있으나, 본 연구는 인구감소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를 6가지 이슈로 한정하여 파급효과 등을 살펴봄. 이처럼 인구감소 문제는 다각적인 양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으나 해법을 찾기 어려움
- 특히, 오랫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 갈등관계가 곳곳에서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합의해야 하는 문제이며 기존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문제임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통합적 혁신이 필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거버넌스적 접근법을 활용해도 정책난제의 특성상 인구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고 부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는 것이 현실임

11) 디지털타임스. (2024년 3월 12일자). “13.2만채 빈집… 해법 못찾는 정부.”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31302100658080001&ref=jeadan](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31302100658080001&ref=jeadan) (검색일: 2024.3.21.)

경기일보. (2022년. 5월 31일자). “[현장, 그곳&] 농어촌과 도심 속 ‘애물단지’ 빈집, 관리 일원화해야.”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531580219> (검색일: 2024.3.21.)

12) 서울뉴스토리. (2022년 10월 14일자). “여의도 44배... 방치된 빈집, 범죄발생 우려 높아.” <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618927> (검색일: 2024.3.13.)

13) KBS뉴스. (2023년 2월 7일자). “‘인구 감소로 파출소 통폐합 필요’…주민 반발 확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599710> (검색일: 2024.3.21.)

## 2. 한국의 인구감소 대응체계 및 정책 분석

### ● 인구문제 대응 체계의 분절화

- 인구문제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이 있음
  - 저출산 대응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인구 관련 정책은 '행정안전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음
  - 그 밖에 교육부, 법무부 등 다수 부처에서 인구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중점적으로 보는 최근 경향에 따라 위에서 제시한 5개 부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해당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며, 각 부처별 정책목표와 대상이 상이함

표 1 | 기관별 인구 및 지방소멸 정책 비교

| 기관         | 인구감소 대응 관련 정책과 담당 부서                                                                                                                                                                                                                                                                                                                                                                                                                                                                                                                                                                                                                                     | 대상                                  |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 신혼부부, 고령자                           |
| 보건복지부      | • 노후준비지원정책, 아동돌봄지원(인구정책총괄과)<br>• 임신 · 출산지원, 모자보건지원(출산정책과)<br>• 아동수당지급, 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 정기적아동실태조사 및 통계정비, 아동인권 증진 지원, 입양(아동복지정책과)<br>•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가정위탁지원,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아동복지교사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br>• 드림스타트, 디딤씨앗통장, 자립수당(아동권리과)<br>•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아동학대대응과)<br>•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건강과)<br>•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자원봉사활성화, 장사제도, 노인여가복지지원(노인지원과)<br>•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위원회,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노인의료복지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요양보험운영과)<br>•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아이행복카드, 보육지원체계 개편(보육정책과)<br>•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시간제보육, 부모급여, 육아종합지원센터(보육사업기획과)<br>•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입소대기, 연장형보육, 어린이집평가제(보육기반과) | 아동<br>영유아<br>노인<br>임신준비여성<br>혹은 임신부 |
| 여성가족부      | • 아이돌봄지원사업(가족문화과)<br>•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가족지원과)<br>• 가족센터 운영(한국건강가정진흥원)<br>•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온가족보듬사업(가족정책과)<br>• 부모역할지원(지역별 가족센터)                                                                                                                                                                                                                                                                                                                                                                                                                                                                                                                                | 유형별 가족                              |
| 행정안전부      | •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균형발전진흥과)<br>• 교부기준 개선(교부세과)<br>•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생활인구 확대사업(균형발전제도과)<br>• 지역청년정책(지역청년정책과)                                                                                                                                                                                                                                                                                                                                                                                                                                                                                                                                               | 지방자치단체<br>서민 · 취약계층                 |

| 기관    | 인구감소 대응 관련 정책과 담당 부서                                                                                                                               | 대상           |
|-------|----------------------------------------------------------------------------------------------------------------------------------------------------|--------------|
| 국토교통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가시티조성(국토도시실)</li> <li>• 지역특화 재생 지원(지역정책과)</li> <li>• 도시계획 개편(도시정책관)</li> <li>• 내집마련 지원(주택토지실)</li> </ul> | 지방자치단체<br>청년 |

출처: 저자 작성.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및 고령화 대비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의 검토, 조정 및 평가, 정책 아젠다의 발굴·추진을 담당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2005년 9월 정식 출범한 정부 추진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임
  - 위원장(대통령), 부위원장(민간위원) 및 7개 부처 장관, 민간위원 17인 총 25인으로 구성됨
  - 저출산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토대로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006년 제1회 저출산·고령사회계획을 수립·발표하였고,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음

표 2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인구감소 대응 관련 정책

| 구분            | 목적                                                     | 대상        | 주요 내용                                                                                                                                                                                                                                                                                                                                                                                                                                                                                                                          |
|---------------|--------------------------------------------------------|-----------|--------------------------------------------------------------------------------------------------------------------------------------------------------------------------------------------------------------------------------------------------------------------------------------------------------------------------------------------------------------------------------------------------------------------------------------------------------------------------------------------------------------------------------|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저출생 현상의 심화, 인구규모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비전 제시 | 신혼부부, 고령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06~’10): 제도적 기반 구축</li> <li>• 제2차(‘11~’15): 임신·출산 지원강화, 일·가정양립 제도 확충 등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 강화</li> <li>• 제3차(‘16~’20): 경제적 요인으로 심화된 만혼·비혼 추세를 반영하여 일자리,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대응 시도</li> <li>• ‘19년도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수정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전환</li> <li>• 제4차(‘21~’25):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를 목표로, 교육제도, 취·창업 지원 등 인재육성,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강화, 일자리 및 주거안정지원을 통한 청년 지원, 경력유지 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여성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주된 일자리 지속 환경 조성, 퇴직 후 전문성 활용 지원 등 신중년의 사회참여 지원</li> </ul> |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1차~제4차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2024년에는 결혼·육아 지원정책을 결혼, 임신, 출산, 영유아, 초등 항목으로 분류하여 발표함<sup>14)</sup>

1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betterfuture.go.kr/index.do>)

##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총괄, 가족·청소년 정책 등을 소관하는 기관으로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 활동·복지 지원 및 보호', '가족 및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의 조직은 2실 1대변인 2국 3관 1단 2TF로 구성되어 있음(2024년 3월 기준)

• 여성가족부 주관 국정과제 중 인구관련 과제의 세부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를 통한 맞벌이 가구 등 양육공백 최소화 및 정부 재정지원 확대로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이 있음
-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단계적 상향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지원 강화',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재 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청소년 부모,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지원 강화' 등이 있음

표 3-1 여성가족부의 인구감소 대응 관련 정책

| 구분            | 목적                                                    | 대상                                                 | 주요 내용                                                                           |
|---------------|-------------------------------------------------------|----------------------------------------------------|---------------------------------------------------------------------------------|
| 아이돌봄지원사업      |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 •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 • 시간제돌봄서비스<br>• 정부지원금<br>•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전반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가정 생활안정 도모       |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및 복지급여 지급                                                         |
| 가족센터 운영       | • 지역주민·다문화가족의 가족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 • 국내 모든 가족 유형<br>• 다문화가족                           | • 가족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 제공                                                             |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 경감 | • 보호자 및 자녀                                         | • 돌봄 품앗이 구성, 프로그램 제공                                                            |
| 온가족보듬사업       | • 위기가족의 복합적 문제해결을 통한 가족기능 회복 도모                       | • 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br>• 1인가구<br>• 다문화가족              | • 가족상담 및 심리·경제적 자립, 지속적인 사례관리<br>• 교육 프로그램 지원<br>• 자녀학습·정서지원<br>• 생활도움, 긴급위기 지원 |
| 부모역할지원        | • 부모교육 지원                                             | • 예비부모<br>• 임신, 출산기, 영유아기, 학령기 자녀 부모               |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br>• 찾아가는 부모교육                                                     |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s://www.mogef.go.kr/>) (검색일: 2024.02.12.)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저출산 대응정책의 변화에 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하였음

그림 9 | 여성가족부 2024년 저출산 대응 정책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6209>), (검색일: 2024.02.23.)

## 행정안전부

### ● 행정안전부는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관리 등을 주로 수행함

- 행정안전부의 조직은 1차관, 1본부, 1차관보·6실·1대변인, 28국·센터·관, 1상황실, 1단, 114개 과, 10개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2023년 8월 기준)
- 행정안전부 주관 국정과제 중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세부 내용:
  -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목표로 함. 주요 내용은 '국가-지방 기능조정', '자치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자치회 개선', '자치경찰권 강화',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 등이 있음
  -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체계 강화: 지역이 먼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면, 국가가 행·재정적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추진함. 지역공약을 임기 내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정책 제감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 내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공약 추진체계',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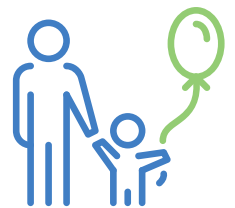


표 4 |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발전 관련 정책

| 구분                            | 목적                                 | 대상        | 주요 내용                                                                                                                      |
|-------------------------------|------------------------------------|-----------|----------------------------------------------------------------------------------------------------------------------------|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기반 확대          | • 인구 자연감소, 수도권 쏠림현상, 지방재정 운용 여건 개선 | • 지방자치단체  |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민간투자자 연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br>• 고향사랑기부제<br>•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교부기준 개선<br>• 지역사업 적극참여를 위한 규제완화, 투자규모 확대 등 지방공기업 지원   |
| 실생활 속 체감도 높은 지방 세제 개편과제 발굴·시행 | • 취약계층의 주거불안 경감                    | • 서민·취약계층 | • 출생가구 주거지원<br>• 서민·취약계층 주거 안정<br>• 장애인·유공자 생활지원                                                                           |
| 지역 고유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토대 구축    | • 수도권 쏠림현상, 지방소멸 방지                | • 지방 거주민  | • 특화된 자치권 부여<br>•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br>• '생활인구', '지역특성 MBTI' 등 지역통계 다변화<br>• 생활인구 확대사업인 '고향올래', '고향있다', 치유 지원사업 등 지역특색 활용 시책 확대 |

출처: '2024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활여건 조성 and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주택토지, 건설, 국토도시, 교통물류, 항공, 모빌리티·자동차, 도로·철도 등을 관리함
  - 국토교통부의 조직은 2차관 5실 4국 18관 87과 9팀으로 구성되어 있음(2023년 1월 기준)
  - 국토교통부 주관 국정과제 중 인구감소 대응 관련 과제의 세부 내용:
    -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청년세대 주거사다리 복원, 일자리 기회 창출, 교육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은 '내집마련', '취업지원 혁신', '청년창업 기반 강화', '미래역량 강화 지원', '교육 부담 완화' 등이 있음

표 5 | 국토교통부의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발전 관련 정책

| 구분                      | 목적                                           | 대상       | 주요내용                                                                                                               |
|-------------------------|----------------------------------------------|----------|--------------------------------------------------------------------------------------------------------------------|
|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 •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 새로운 균형발전                     | • 지방자치단체 | • 기업이 스스로 투자,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메가시티 조성<br>• 강소도시·낙후지역의 지역특화 재생 지원<br>• 도시혁신계획구역, 복합용도계획구역 도입 등 도시계획 개편 |
|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 • 만혼과 비혼의 원인 중 하나인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 • 청년     | • 청년·신혼·생애최초계층에 원가주택 공급, 청약 및 특별공급제도 개선으로 내집마련 지원<br>• 취업지원 혁신<br>• 청년창업 기반 강화<br>•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저금리 유지 등 교육 부담 완화 |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 (검색일: 2024.03.23.)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출생, 성장, 죽음 등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의료 및 복지 지원정책을 총괄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조직은 4실 1대변인 6국 16관 83과 1단 2팀, 소속기관 12개로 구성되어 있음(2023년 8월 기준)
- 보건복지부 인구감소 대응 정책으로는 인구, 아동, 노인 관련 업무가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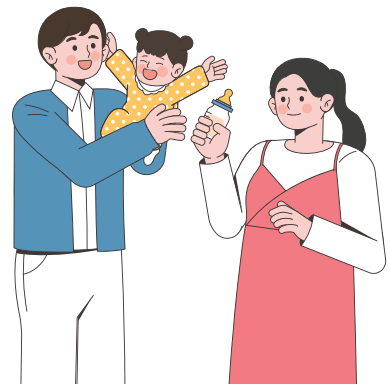
표 6 | 보건복지부의 인구감소 대응 관련 정책

| 구분                                                                                                                  | 목적                                                                                                                                                                       | 대상                                                                                                           | 주요 내용                                                                                                                                                                                                    |
|---------------------------------------------------------------------------------------------------------------------|--------------------------------------------------------------------------------------------------------------------------------------------------------------------------|--------------------------------------------------------------------------------------------------------------|----------------------------------------------------------------------------------------------------------------------------------------------------------------------------------------------------------|
| 인구정책<br>(노후준비지원 정책,<br>아동돌봄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년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li> <li>•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아동 건전육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민</li> <li>• 지역 내 돌봄 서비스 필요 만18세 미만 아동</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수립, 정책심의기구 운영,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실시</li> </ul>                                                                            |
| 출산정책<br>(임신·출산지원,<br>모자보건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 준비여성 혹은 임산부의 지원</li> <li>• 저소득층 영아의 경제적 부담 경감</li> <li>•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준비여성 혹은 임산부</li> <li>• 저소득층 영아</li> <li>•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자보건수첩, 철분자, 엽산제, 모바일앱 등 운영</li> <li>• 저소득층 영아 가정 기저귀 및 분유 구매비용을 바우처포인트로 지급</li> <li>•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기재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li> </ul>               |
| 아동복지정책<br>(아동수당지급, 아동정책기본<br>계획 수립, 정기적 아동실태<br>조사 및 통계정비, 아동인권<br>증진지원, 입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li> <li>•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li> <li>• 보호대상아동 복지증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8세 미만 아동</li> <li>• 보호대상아동</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1인당 월10만원 지급</li> <li>• 정기적(3년) 아동 종합실태조사 실시</li> <li>• 국내입양우선추진제, 국내입양가정 경제적 지원, 국내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등</li> <li>•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및 운영</li> </ul>                     |
| 아동권리<br>(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가정<br>위탁지원, 전국가정위탁지원<br>센터 현황, 아동복지교사지원,<br>아동복지시설 운영, 공동생활<br>가정 운영, 드림스타트, 디딤<br>씨앗통장, 자립수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대상아동 자립준비역량 강화, 자립 기반 마련</li> <li>•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li> <li>• 아동복지서비스 인력 양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시설 보호중인 아동</li> <li>• 취약계층 아동</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li> <li>• 양육보조금, 생계비,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자립정착금, 대학진학자금, 전세주택, 전문 아동보호비, 아동용품구입비 지원</li> <li>•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li> </ul> |
| 아동학대<br>(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br>보호, 실종아동 등의<br>보호 및 지원, 아동안전사고<br>예방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li> <li>• 실종예방, 장기실종아동가족 지원</li> <li>•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피해 아동</li> <li>• 실종아동</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예방 정책수립, 인프라 강화, 교육 및 홍보</li> <li>• 실종아동 가족 상담 서비스</li> <li>• 무연고아동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li> <li>•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li> <li>• 안전사고 예방사업</li> </ul>                |
| 노인정책<br>(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br>지원사업, 노인실명예방관리<br>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br>노인주거복지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관리, 노인실명 예방 등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60세이상 모든 노인</li> <li>• 저소득노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 조기검진</li> <li>• 노인 검진 및 개안수술</li> <li>• 노인주거복지시설</li> <li>• 노인맞춤돌봄서비스</li> </ul>                                                                             |

## 2. 한국의 인구감소 대응 현황분석

| 구분                                                       | 목적                                                                                                                                     | 대상                                                                                                  | 주요 내용                                                                                                                                                                                                                                                                    |
|----------------------------------------------------------|----------------------------------------------------------------------------------------------------------------------------------------|-----------------------------------------------------------------------------------------------------|--------------------------------------------------------------------------------------------------------------------------------------------------------------------------------------------------------------------------------------------------------------------------|
| 노인지원<br>(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노인자원봉사활성화, 장사제도, 노인여가복지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노인복지 향상 기여</li> <li>노인 인적자원 활용</li> <li>매장위주 장사제도를 화장문화로 전환 도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li> <li>만60세 이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li> <li>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li> <li>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개최</li> <li>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li> </ul>                                                                                                                                  |
| 요양보험제도 및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노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들의 부담경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장기요양 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li> <li>의료급여수급 권자로써 65 세이상 노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li> <li>장기요양위원회</li> <li>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li> <li>노인의료복지 시설</li> <li>재가노인복지시설</li> </ul>                                                                                                                                   |
| 보육정책, 사업기획, 보육기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래인적자원 투자</li> <li>부모양육부담 경감</li> <li>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공립어린이집 확충</li> <li>보육인력 전문성 제고</li> <li>아이행복카드</li> <li>보육지원체계 개편</li> <li>영유아보육료</li> <li>가정양육수당</li> <li>시간제보육</li> <li>부모급여</li> <li>육아종합지원센터</li> <li>3-5세 누리과정</li> <li>어린이집입소대기</li> <li>연장형보육</li> <li>어린이집평가제</li> </ul>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검색일: 2024.03.23.)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3. 문제점

#### ● 인구문제 대응 부처의 분절화로 인한 정책적 합의 및 일관성 미흡

- **인구감소에 대한 범부처 간 개념적 합의와 정책적 목적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부처별로 정책목적과 대상, 추진 정책 내용의 차이로 일관성 부족**
  - 인구감소가 국가적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방향성 정립이 미흡하고 정책적 합의가 부족함
  - 우리나라 정부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감소 발생 원인과 인구감소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 및 범위를 부처별로 한정적으로 설정

#### ● 인구문제 관련 정책 간 연계성 미흡 및 통합적 접근 부족

-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소멸, 인프라, 보육 및 교육,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과 연계되어 있는 특징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 대응 정책은 단순히 자연증가를 위한 접근법만으로는 안되며, 인구의 이동과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의 연계가 필요함
  - 예를 들어, 인구는 크게 자연 증감과 사회적 이동 관점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인구감소는 저출생이라는 원인과 전출입으로 인한 수도권 쏠림 현상, 지방소멸 등 사회적 이동과 관련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문제해결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즉, 인구이동에 따른 지방소멸 대비, 살고 싶은 마을 조성, 국내 인구이동 장려, 해외 이민자 수용,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등 인구문제에 대한 확장된 차원에서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 따라서 부처 간 개별적 정책추진이 아닌 통합적 접근과 정책연계가 필요함

#### ● 인구추정 및 산정을 위한 부처별 개념과 기준 상이

- **감소인구의 추정을 위한 기준이 각 부처 간 상이하여 정책대상인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에게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체류인구를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특정 지역에서 1박 이상 머무르는 경우에만 체류인구로 측정함
  - 행정안전부는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고향올래사업(GO鄕 ALL來) 사업’,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지방이주 수요의 정착지원을 위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거점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활력타운', 빈집이나 폐시설 활용을 위한 '미관협력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생활인구 개념과 국토교통부의 인구 개념 및 산정방법이 상이하여 후속적인 협력과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예를 들어, 체류인구를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 실제 체류인구 관련 정책 내용이 굉장히 모호해질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함. 현재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개념에 대한 오류와 부정확한 데이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이삼수 외, 2024: 3-4)
- 통계청은 유동인구를 타 지역에서 2시간 이상 머물던 사람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여 2시간 이상 머문 경우로 측정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는 방문인구를 일상생활권(거주, 통근, 통학 등)을 벗어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일정 시간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 정의하며, 일정 시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특정 기지국에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



---

##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부혁신 해외 사례

일본과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

### 일본 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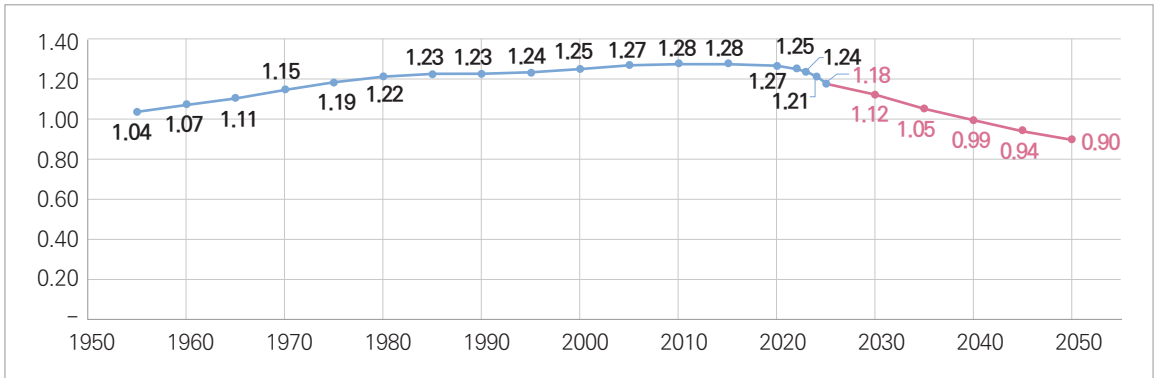
## 1. 인구감소 현황 및 정책추진 배경

### ● 일본의 인구감소 현황

#### ● 일본은 인구감소가 시작된 시기는 1990년대부터이며 현재도 진행 중임<sup>15)</sup>

- 1989년의 1.57쇼크 이후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총 인구는 2010년 1억 2,806만명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4년 현재 1억 2,263만명으로 나타남(Worldometer)
- Worldometer는 일본의 미래 인구전망을 2025년 1억 1,762만명, 2030년 1억 1,241만명, 2040년 9,948만명, 2050년 9,009만명으로 전망하였음

그림 10 | 일본의 인구 추세선 (단위 : 억 명)



출처: Worldometer 일본 인구 자료(검색일: 2024.03.13.)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 일본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1990년대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저출산대책, 지방창생정책 등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였음

#### ● 일본은 인구변화에 따른 전략의 변화를 통해 제도적·환경적·문화적 개선을 이루고자 하였음

- 1992년 「육아휴직법」, 1994년 「엔젤플랜」, 1999년 「신엔젤플랜」 제정 등 정책방향의 변화와 정책수단 강구를 통해 저출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2010년 일본은 기존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낮다고 판단하여 출산 자체보다는 양육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함
- 기존에는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일하는 방식 변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나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인구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15) <https://www.worldometers.info/world-population/japan-population/>

-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정책 공통점은 정책대상으로 ‘유자녀 기혼여성 > 유자녀 기혼남성 > 아동·청소년’ 순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함

## ● 일본 인구정책의 최근 혁신적 변화

### ● 최근 들어 일본은 한국과 달리 정책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수단을 다양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정책변동을 추진함<sup>16)</sup>

- 일본은 미혼청년을 출산가능 잠재대상으로 인식하여 미혼청년 대상 정책이 점차 증가함
- 일본은 아동청소년 대상 정책을 일반아동청소년과 발달장애 또는 장애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수고로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책을 수립함
- 일본은 문화조성과 인식개선 및 확산 기반 제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은 재정지원 및 제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춤
- 한국은 일본에 비해 금전적 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많음. 한국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는 반면, 일본은 최근 들어서 소득조건 기준을 적용한 정책을 수립 중에 있음

표 6 | 한국과 일본의 출산지원정책 시기별, 대상별, 형태별 비교

| 구분      | 한국                                                                                                                               |    |     |       |     |       |        |       |                     | 일본                                                                                                                                      |    |     |       |     |       |        |       |       |  |  |
|---------|----------------------------------------------------------------------------------------------------------------------------------|----|-----|-------|-----|-------|--------|-------|---------------------|-----------------------------------------------------------------------------------------------------------------------------------------|----|-----|-------|-----|-------|--------|-------|-------|--|--|
| 시기별     |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06~'10)<br>•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1~'15)<br>•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6~'20)<br>•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1~'25) |    |     |       |     |       |        |       |                     | • 엔젤플랜(1995~1999)<br>• 신(新)엔젤플랜(2000~2004)<br>• 신(新)신(新)엔젤플랜(2005~2009)<br>• 자녀·육아비전(2010~2014)<br>• 자녀·육아신제도(2015)<br>• 1억총활약플랜(2016~) |    |     |       |     |       |        |       |       |  |  |
| 수혜 대상자별 | 구분                                                                                                                               | 미혼 | 기혼  |       |     |       | 아동 청소년 | 기업    | 범 국 민               | 구분                                                                                                                                      | 미혼 | 기혼  |       |     |       | 아동 청소년 | 기업    | 범 국 민 |  |  |
|         |                                                                                                                                  |    | 무자녀 |       | 유자녀 |       |        |       |                     |                                                                                                                                         |    | 무자녀 |       | 유자녀 |       |        |       |       |  |  |
|         | 청년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     |       |     |       |        |       |       |  |  |
|         | 제1차                                                                                                                              | 1  | 8   | 7     | 19  | 15    | 11     | 1     | 3                   | 신신                                                                                                                                      | 2  | 3   | 2     | 16  | 15    | 12     | 1     | 2     |  |  |
|         | 제2차                                                                                                                              | 2  | 5   | 5     | 22  | 18    | 13     | 1     | 0                   | 자녀·육아                                                                                                                                   | 9  | 10  | 8     | 48  | 40    | 44     | 5     | 2     |  |  |
| 제3차     | 0                                                                                                                                | 7  | 6   | 19    | 17  | 4     | 0      | 0     | 자녀·육아(신)<br>1억총활약플랜 | 아동 있는 가정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7                                                                                                                                       | 5  | 6   | 9     | 7   | 4     | 1      | 0     |       |  |  |
| 지원 형태별  | 구분                                                                                                                               | 제도 | 제정  | 제도/제정 | 문화  | 제도/문화 | 인식     | 제도/인식 | 합계                  | 구분                                                                                                                                      | 제도 | 제정  | 제도/제정 | 문화  | 제도/문화 | 인식     | 제도/인식 | 합계    |  |  |
|         | 제1차                                                                                                                              | 19 | 7   | 7     | 1   | -     | 4      | -     | 38                  | 신신                                                                                                                                      | 23 | -   | 2     | 1   | -     | 2      | -     | 28    |  |  |
|         | 제2차                                                                                                                              | 30 | 3   | 5     | -   | -     | -      | -     | 38                  | 자녀·육아                                                                                                                                   | 76 | -   | 5     | 4   | -     | 10     | -     | 99    |  |  |
|         | 제3차                                                                                                                              | 18 | 1   | 3     | -   | 1     | -      | 1     | 24                  | 자녀·육아(신)<br>1억총활약플랜                                                                                                                     | 17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12    |       |  |  |

출처: 오수진. (2023: 32~68)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16) 오수진. (2023: 32~68)을 참조하여 작성

## 2. 인구감소 대응 체계

### ● 내각부(컨트론타워)-후생노동청(아동 육아)-문부과학청(교육지원)의 3각 협업구조

- 일본 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인 내각부가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총괄을 담당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내각부(内閣府, Cabinet Office)는 경제, 재정, 과학기술, 지방창생, 생활, 방재,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외교·안전보장, 국가기반지원제도 등의 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그 중 생활부분에서는 '어린이·젊은이 육성 지원', '어린이의 빈곤 대책', '청소년 유해환경대책', '자녀·육아지원' 등을 다루고 있음
- 내각부 소속 특별기관에는 '저출산사회대책회의', '고령화사회대책회의' 등이 있음
- 후생노동청에서는 크게 '건강·의료', '아동·육아', '장기요양·건강복지서비스', '고용·노동', '연금', '기타' 6개 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그 중 아동·육아는 '어린이와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 촉진' 두 가지를 다루고 있음
- 문부과학청은 「교육기본법」 제13조(학교, 가족, 지역주민의 파트너십과 협력)에 의거하여, 사회 전체가 교육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 선택하는 미래위원회

- 2014년 1월 내각부 산하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인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하는 미래위원회(選択する未来委員会)'를 설치하고 민간위원 9인을 위촉하였음
- 일본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과제와 정책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인구감소, 지방재생 등의 종합적 정책 마련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인구, 경제, 지역사회의 변화에 따른 대응과제를 제시하였으며, 대응의 성공 혹은 실패에 따른 일본의 미래상을 제시하였음<sup>17)</sup>
- 선택하는 미래위원회는 향후 일본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 프레임を提供하였으며,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4」,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마을·사람·일 창생종합전략, 아동미래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침



17) 내각부 선택하는 미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special/future/>), 선택하는 미래위원회 2.0 보고서

## ● 아동가정청 신설을 통한 인구·가족·복지 정책 일원화 추진 예정

### ● ‘아동가정청’의 설립을 통해 인구정책·가족정책·복지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종합적·체계적인 인구정책 수립 및 집행을 하고자 함

- 2022년 아동가정청설치법(こども家庭庁設置法) 제정에 따라 ‘아동가정청’이 설치될 예정임(2024년 4월 출범 예정). 아동가정청 설립을 통해 통해 일본 내각부와 후생노동성이 담당해온 아동·육아지원 정책업무를 일원화하고, 보육, 아동학대, 저출산대책, 장애아 관련 정책을 추진함(조성호, 2023: 43)
  - 아동가정청은 내각총리대신 직속 내각부 외청으로 설치되며, 1관방 2국, 350명 정도로 구성될 예정임
  - 아동가정청설립법에서는 아동가정청 설립 목적을 ‘아이(심신의 발달 과정에 있는 자)가 자립하여 개인으로서 존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해, 아이에게 있어서 가정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아이의 연령 및 발달과정에 따라, 그 의견을 존중하고 그 개선의 이익을 우선해서 고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아이 및 아이가 있는 가정의 복지증진 및 보건의 향상과 그 외 아이의 건전한 성장, 아이가 있는 가정에 있어서의 보육에 대한 지원 및 아이의 권리 이익의 옹호에 관한 사무를 행함과 동시에 해당 업무에 관련된 특정 내각의 중요 정책에 관한 내각의 사무를 돕는 것을 임무로 함’으로 밝히고 있음
- 아동가정청은 아동이 독립된 개인으로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 부모와 가정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들의 의견 반영,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및 비영리단체와 같은 시민사회와의 적극적 교류·협력을 지향함
  - 장관관방은 정책 기획 및 종합조정, 지원사업 홍보 등을 시행함
  - 성육국은 임신·출산, 모자보건, 성육의료, 미취학아동 양육보장, 보육소 지침 등을 문부과학성과 연계하여 수행함
  - 지원국은 소외 아동 및 가정 지원, 아동학대방지 대책, 아동빈곤대책, 한부모가정지원, 장애아 지원 등을 담당하고, 학교 집단 괴롭힘 방지대책은 문부과학성과 연계하여 수행함(조성호, 2023: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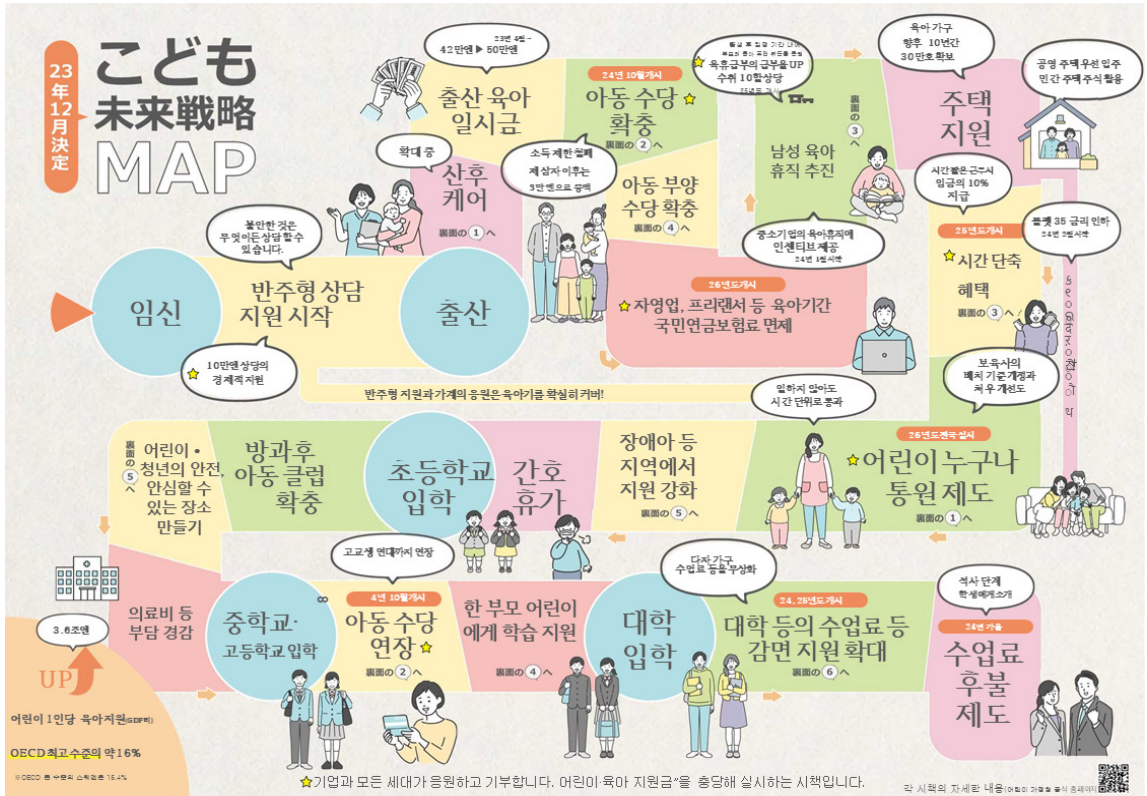
┃ 그림 11 ┃ 일본의 아동가정청 조직도



출처: 조성호. (2023: 39).

- 아동가정청은 어린이의 전 생애주기를 지원하는 '어린이 미래 전략'을 발표하고 다음의 방향성을 제시함: 1) 청년층의 소득 증가, 2) 사회전체의 구조·환경을 전환, 3) 모든 아이·보육세대를 빈틈없이 지원함
- 이를 위해 아동수당의 지원 확대, 출산, 아이 의료비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반주형 상담 지원, 고등교육의 부담경감, 보육세대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정책을 수립함

그림 12 | 어린이 미래 전략 맵



출처: 아동가정청 홈페이지(<https://www.cfa.go.jp/resources/kodomo-mirai>)를 저자 재정리

### 3. 인구감소 대응 정책 및 우수 사례

#### ● 일본 인구감소 대응 정책 거버넌스의 특징

- 일본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과 법령에서 총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의무와 권한을 명확하게 설정해 놓았음
- 국가는 법제도의 제정 및 개정, 전국적 방침이나 기준의 작성,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 제도의 구조와 기반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함. 광역자치단체나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기관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 주민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응하기 위해 주요 시책을 집행함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가정과 개인에게 아동수당 등 지원금의 직접 지급, 임신 및 출산 지원, 모자보건 및 소아의료 체계 확충, 지역의 보육지원, 보육 서비스 확충, 방과 후 대책, 보육을 위한 주택 정비, 노동환경의 재검토, 일과 삶의 균형 촉진 등 보육을 위한 대부분 지원시책의 집행을 담당함
- 2003년 제정된 ‘소자녀사회대책기본법’은 저출산문제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책무를 정의하였음. 국가는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결정·집행하는 의무를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는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하는 것이 주요 책무임
- 일본의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실제 정책 추진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비영리단체, 기업과의 연계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총무성은 2016년 3월 “인구감소사회에 적합하게 대응하는 지방행정단체 및 거버넌스의 모습에 관한 답신”을 통해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적절한 역할 분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감사위원, 의회, 주민의 역할을 상세하게 제시하였음
- 특히, 지방권과 3대 도시권을 분류하고, 광역 내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관계 조직의 강화, 광역 외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3대 도시권과 지방권의 이주 및 교류의 촉진 등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함

#### ● 지방창생정책과 관계인구 개념 도입<sup>18)</sup>

-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쇠퇴, 지방소멸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일본은 지방창생정책과 관계인구 개념 도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일본의 총 인구는 2010년 1억 2,806만명 이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음. 2014년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로 인해 2040년 전체 1,727개 중 896개 지자체가 소멸될 것이라는 ‘마쓰다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이에 일본은 국가적 위기를 선포함
-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비하기 위해 2014년 11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을 제정하고 ‘지방창생정

18)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창생본부사무국내각부지방창생추진사무국. (2020)., 미소구치 히로시. (2015)., 총무성. (n.d.)을 참조하여 작성

## 책'을 도입하였음

- 제1기 지방창생종합전략(2015~2019년)은 지방 일자리 창출, 지방인구흐름 생성, 청년세대 결혼·출산·육아 희망 성립, 안심생활기반확보 및 지역 간 연계강화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수행됨
- 제2기 지방창생종합전략(2020~2024년)은 돈버는 지역, 안심업무 환경조성, 지방연계강화, 지방으로의 이주와 정착 추진, 결혼·출산·육아 희망 성립, 매력있는 지역 형성 등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수행됨
-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는 2060년까지 일본 인구 1억명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비수도권 지역 인구증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함
- 현재 제2기 지방창생정책(2020~2024년)이 실행 중임

| 그림 13 | 제1기, 제2기 일본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정책

| 구분   | 제1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정책 (2015~2019년)                                                                                                                                                      |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정책 (2020~2024년)                                                                                                                                            |
|------|--------------------------------------------------------------------------------------------------------------------------------------------------------------------------------------|----------------------------------------------------------------------------------------------------------------------------------------------------------------------------|
| 비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문제의 극복(2050년 1억 명 인구 확보, 출산율 1.8 실현, 도쿄 일극집중 시정 등)</li> <li>• 성장력 확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에도 활력 있는 지역사회 실현(인구감소 완화, 지역 외부로부터 생산력을 높이고 지역 내 경제순환 실현, 인구감소 적응 등)</li> <li>• 도쿄권 일극집중 시정</li> </ul>                          |
| 기본목표 | ① 지방에 일자리를 창출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li> <li>- 지방 인재 육성, ICT 활용 등</li> </ul>                                                     | ① 돈 버는 지역을 만드는 동시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특성에 맞게 생산성을 높이고, 돈 버는 지역 실현,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 조성</li> </ul>                                     |
|      | ② 지방으로 새로운 인구이동 흐름을 만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이주 촉진(U. I, J턴)</li> <li>- 일본판 생애활약마을 구상 등</li> </ul>                                                           | ② 지방과의 연계 강화와 지방으로의 인구 흐름을 만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으로 이주와 정착 추진</li> <li>- 관계인구 등 지방과 연결고리 강화</li> </ul>                                           |
|      | ③ 청년세대의 결혼·출산·육아 희망이 이루어지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고용대책 추진</li> <li>- 일-가정 양립 실현 등</li> </ul>                                                                | ③ 결혼·출산·육아 희망을 이루어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출산·육아하기 좋은 환경 조성</li> <li>- 일-가정 양립, 여성의 활약 추진 등</li> </ul>                                              |
|      | ④ 시대에 맞는 지역을 만들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은 거점 형성 및 기존 자산 관리</li> <li>- 지방 도시경제·생활권 형성 등</li> <li>- 대도시권에서 안심생활 기반 확보</li> </ul> | ④ 사람이 모이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 있는 지역을 만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 높은 생활을 위한 마을 기능</li> <li>- 지역자원을 활용한 개성 있는 지역 형성</li> <li>- 안심하고 생활이 가능한 마을 만들기</li> </ul> |
| 횡단목표 | -                                                                                                                                                                                    | ① 다양한 인재의 활약을 추진한다.                                                                                                                                                        |
|      | -                                                                                                                                                                                    | ②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동력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Society 5.0, 지방창생 SDGs 등</li> </ul>                                                                     |
| 지원제도 | 인적 지방창생 인재지원제도, 지방창생 공세르주(안내인) 제도                                                                                                                                                    | 지방창생 인재지원제도, 지방창생 공세르주(안내인) 제도                                                                                                                                             |
|      | 재정 지방창생교부금제도                                                                                                                                                                         | 지방창생교부금제도<br>(기업판 고항세, 지방 거점 강화세제 연장·확충 등)                                                                                                                                 |
|      | 정보 지역경제 분석시스템(RESAS)                                                                                                                                                                 | 지역경제 분석시스템(RESAS)                                                                                                                                                          |

출처: 차미숙, (2021: 99).

- 지방창생정책은 소멸위험도가 높은 지방을 대상으로 단편적 인구증가에 초점에 맞춘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마을의 조성 → 이주 인구증가 →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통해 인구증가와 지방소멸, 일자리 확대 등이 연계되도록 함(총무성, n.d.: 3-4)
  - 지방창생전략의 주요 내용은 마을·사람·일자리의 창생과 선순환 확립이며, 일자리가 사람을 모으고, 사람이 일 자리를 창출하며 이를 지원하는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의미를 내포함
  - 현재 실행 중인 제2기 지방창생정책(2020~2024년)의 구체적인 전략은 아래와 같음
    - 돈 버는 지역,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조성
    - 지방 연계 강화, 지방으로의 이주와 정착 추진
    - 결혼·출산·육아 희망 성립
    - 매력있는 지역 형성
- 지방창생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총리 직속 기구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를 신설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세부사업을 추진함(총무성, n.d.: 1)
  - 2014년 지방창생 추진 전담기구로 아베총리 직속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를 설치하고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본부장은 총리, 부분장은 지방창생담당장관과 내각관방장관이 담당함
    - 지역에서는 광역지자체와 시정촌 단위 지방정부가 실질적 사업을 담당함
- 지방창생전략 시행 첫해인 2015년에는 일본 출생률이 1.43%에서 1.45%로 상승하는 효과를 창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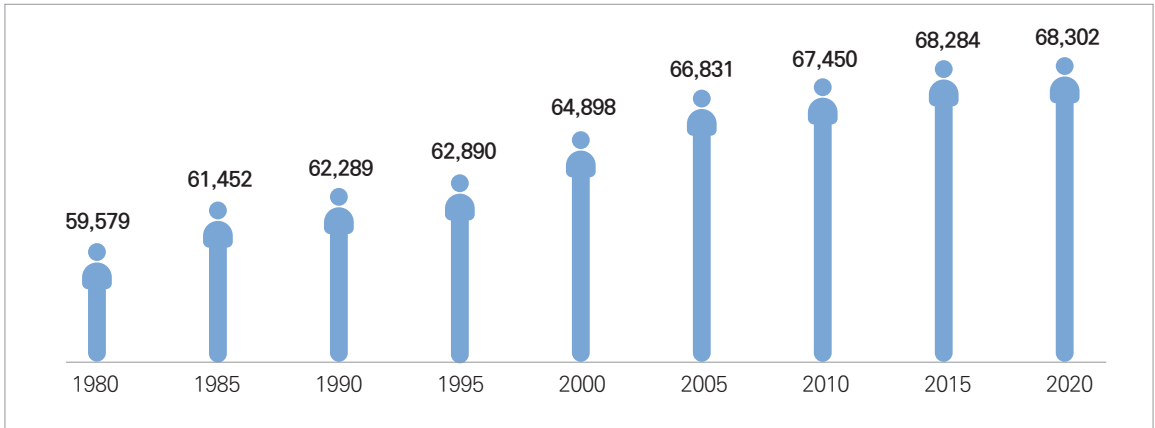
### ● (성공 사례1) 후쿠이 모델<sup>19)</sup>

- 일본 후쿠이현은 교육이 지역을 되살린 사례로 지역맞춤형 자치교육을 펼치고 있음<sup>20)</sup>
  - 후쿠이 모델은 ‘교육 → 고용 → 정주’ 모델로서 자치교육, 시민주역, 지역문화, 혁신제품, 여성고용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공식 지역활성화 모범사례로 선정됨
  - 후쿠이현 사바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전입인구의 연령대가 25~39세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0년간 행복도 조사에서 후쿠이현 사바에서는 일본 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후쿠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작동됨을 알 수 있음

19) 후지요시 마사하루. (2016: 273-283)를 참조하여 작성

20) 한국일보. (2022년 1월 11일자). “학교통폐합이 불러온 인구참사...학교 재건하자 생기도는 지역.”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0711380000900> (검색일: 2024.3.18.)

| 그림 14 | 사바에 시의 인구증가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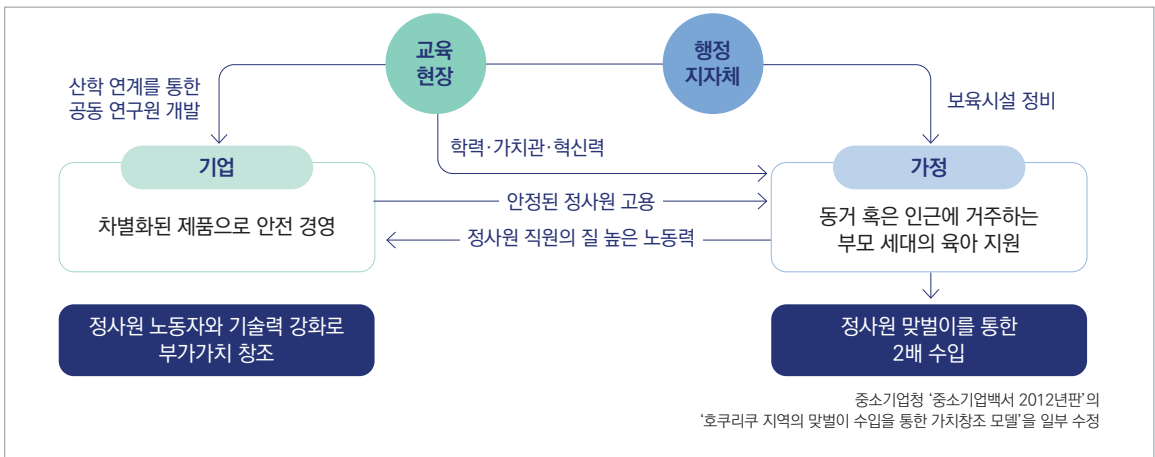


출처: 춘천사람들.(2023). <https://www.chunsa.kr/news/articleView.html?idxno=55613> (검색일: 2024.04.01.)<sup>21)</sup>

### ● 주요 사업 내용

- 자발적 교육을 통한 교육행정 혁신: 디자인사고를 통하여 실천교육을 실시
- 아이디어에서 상품개발까지 지역 전체를 인큐베이터화
- 시민들이 주역이 되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 낯선 이를 대접하는 전통을 통한 유입 인원의 지속적 거주

| 그림 15 | 후쿠이 모델



출처: 후지요시 마사하루. (2016: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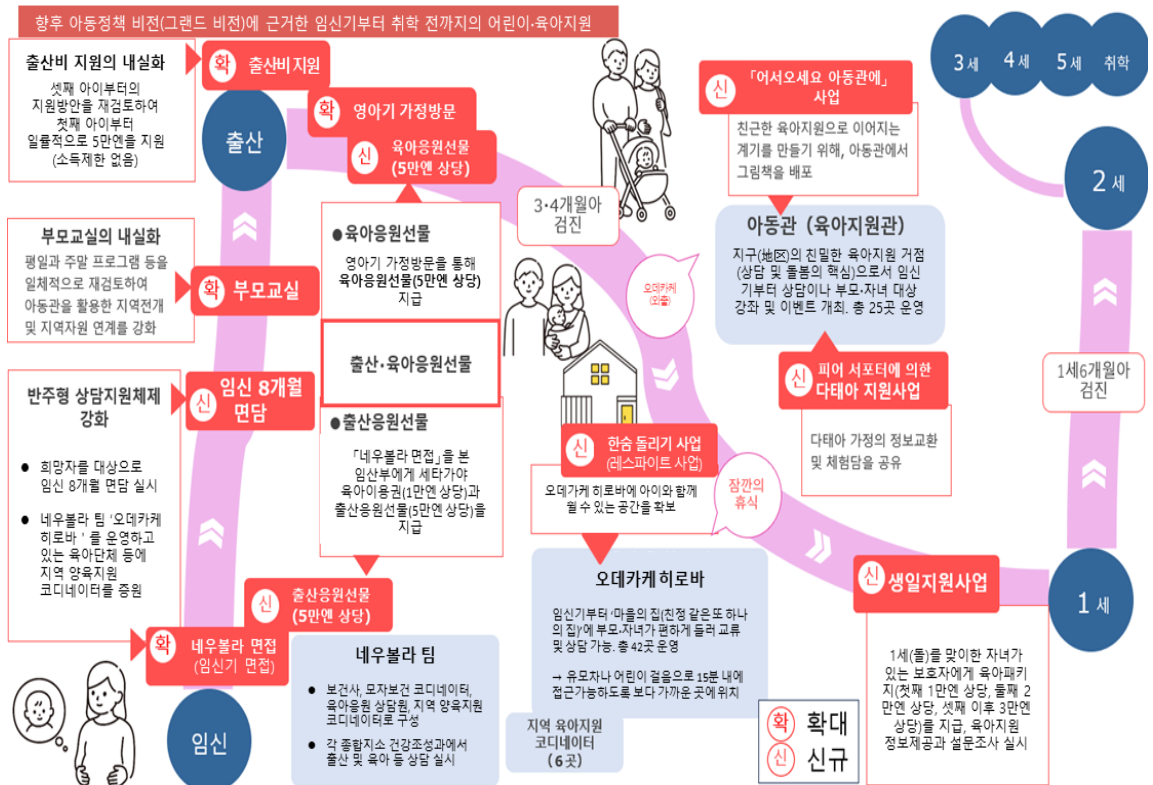
21) 춘천사람들. (2023년 6월 20일자). “‘교육도시 춘천’ 진단 ② 교육도시 성공, 일본 후쿠이현 사례에서 배워야.” <https://www.chunsa.kr/news/articleView.html?idxno=55613> (검색일: 2024.3.18.)

## ● (우수 사례2)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반주(伴走)형 보육 정책<sup>22)</sup>

### ● 일본 도쿄도의 반주형 보육정책 개요

- 2022년 봄 도쿄도는 '아동계획 기초조사'를 근거로 국가가 반주(伴走, 개인의 일을 함께 생각하고,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형 정책을 수립함
- 기초조사 결과 '①일상적으로 아이들 돌봐줄 친구나 지인이 없음, ②임신 중이나 출산 후, 주위의 도움을 받거나 안부를 묻는 경우가 적음, ③보육의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곳이 감소, ④ 육아가 힘들다고 느끼는 보호자일수록 육아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적음' 등 4가지 특징이 나타나, 임신기부터 지속적으로 보육 인력이나 장소 지원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도출됨

| 그림 16 | 향후 아동정책 비전 근거: 임신기부터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육아 지원



출처: 모리타 아케미. (2024). 서울 한자녀지원센터 창립 15주년 기념 포럼 자료.

22) 모리타 아케미. (2023: 10-16); 모리타 아케미. (2024)를 참조하여 작성

### ● 주요 사업 내용

- 이용자지원사업 담당자로 배치된 지역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증원: 지역별 네우볼라팀(지역보건사, 모자보건 코디네이터, 육아응원상담원)에 육아지원코디네이터 추가
- 기존 방식과 시스템을 임신시기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적용함
- 육아이용권(1만엔 상당), 출산응원기프트(5만엔 상당), 돌맞이 생일지원 육아패키지 등 금전적 제공
- 아동관을 육아지원관으로 개편하여 임신기부터 돌봄지원까지 사업을 확장함
- 육아경험자 등 모자보건으로 연결되는 장소(지역 육아지원 거점사업)를 보다 가까운 장소(유모차나 아이가 걸어서 15분 이내인 거리)로 정비하고 이용률이 높은 만원 사후조리사업의 경우 시설을 증설함
-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인근 장소 지원사업에서 부모와 자녀가 편히 지낼 수 있는 레스파이트(respite)사업 개시

### ● (우수 사례3) 치바현 나가레야마시<sup>23)</sup>

#### ● 치바현 나가레야마시의 보육정책 배경

- 나가레야마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시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약 4.2만명이 증가하였고 그 중 35~39세의 인구와 4세 이하 아동의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 합계특수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2022년 기준 전국 평균 1.26, 치바현 평균 1.18, 나가레야마 1.50)
- 나가레야마는 수도권 동북부 약 25km에 위치한 인구 규모 20만의 도시로 “육아환경에 특화된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숲의 마을”로 브랜드화하고 30~40대 육아세대를 주 타겟으로 삼음

#### ● 주요 사업 내용

- 2010년 17개의 어린이집을 104개로 증설하고, 2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도교와 연결되는 지하철역 앞 송영보육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출퇴근 부모가 송영보육스테이션에 아이를 데려오면 104개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이동시켜 주는 서비스를 제공함(이용료 하루 100엔, 한달 2,000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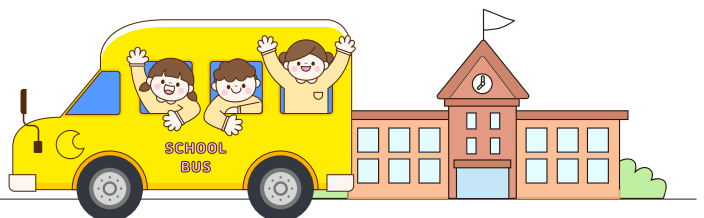
23) 나가레야마시 홈페이지; 매거진 한경. (2023)을 참조하여 작성

그림 17 | 송영스테이션의 이미지



출처: 타사카고 스쿨 오오타카의 숲 분원 공식홈페이지(<https://otakanomori.tksk.ed.jp/>) (검색일: 2024.04.01.)

- 일본 전역의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송영보육스테이션을 설치하였으나 나가레야마와 같이 어린이집 104곳 전체 대상 운영은 하지 못함
- 보육시스템, 학군, 의료서비스, 고용 개선을 통해 보육을 위해 유입된 주민들이 보육이 완료된 후에도 해당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함
- 영어교육 조기화 등 학군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형 물류센터 등 고용환경을 개선한 결과, 도쿄 출퇴근 주민보다 시내 근무 주민 수가 증가함



---

##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부혁신 해외 사례

일본과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 호주 사례 분석



## 1. 인구감소 현황 및 정책추진 배경

### ● 호주의 인구변화 추세

- 호주의 인구는 193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으나 출생에 따른 자연증가 비율(출생율)은 1970년대 이후 1.7~2.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1934년 이후로 등록된 출생아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1980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 18 | 호주의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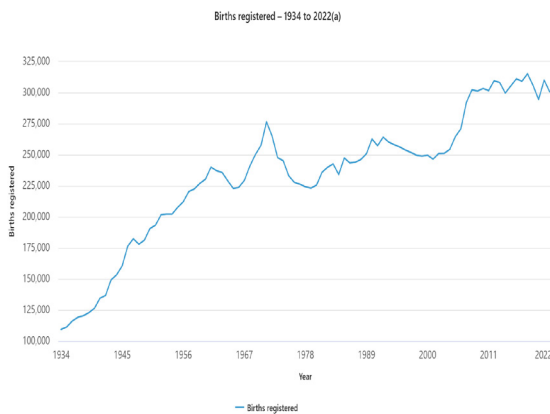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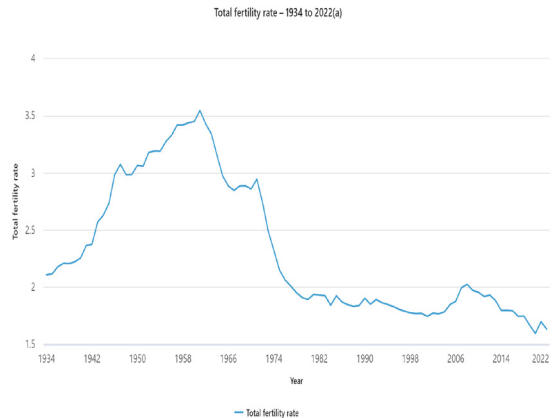


그림 19 | 호주의 출산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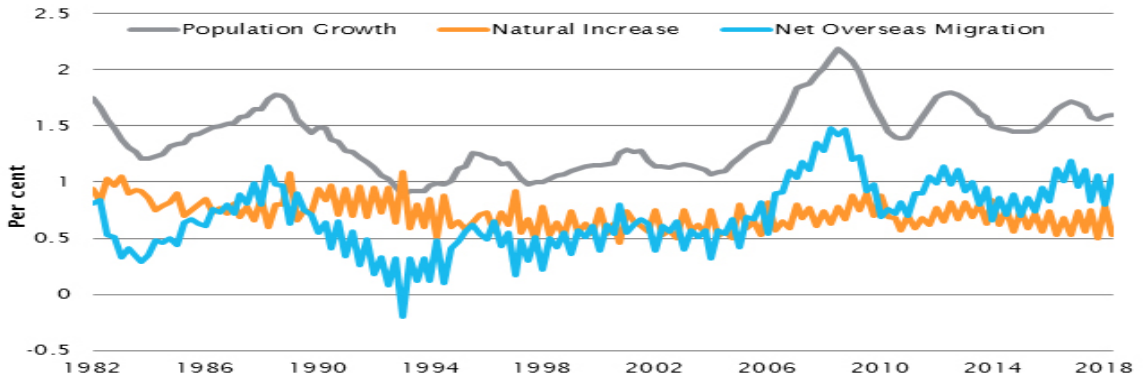


출처 : 호주 통계청. (n.d.). <https://www.abs.gov.au/statistics/people/population/births-australia/latest-release>. (검색일: 2024.4.2.)

- 전체 인구 수의 증가는 자연증가나 순 국내 이주 증가보다는 활발한 이민정책의 효과에 기반하고 있음
- 그러나 해외로부터 유입된 인구의 대부분이 대도시 주변에 정착하는 경향이 있어 지역 간 인구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수준 차이, 환경문제, 범죄, 교육 수준 차이 등의 부수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대도시인 멜버른과 시드니 지역의 인구 집중 대책은 호주 내 중요한 정치적 이슈 중 하나임

● **호주는 지역인구증가를 ‘자연증가 + 순 해외 유입(이민) 증가 + 순 국내 이주 증가’로 정의하고 있으며, 1960년대부터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음**

| 그림 20 | 호주의 인구 개념에 따른 인구 변화 추이(1982~2018년)



출처 : Parliament of Australia. (2019). Population Policy and the Budget.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FlagPost/2019/April/Population\\_Policy\\_and\\_the\\_Budget](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FlagPost/2019/April/Population_Policy_and_the_Budget). (검색일: 2024.4.11.)

● **호주 인구정책의 목표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대비, 노동력 부족 해결을 통한 경제성장 유지임**

- 호주 정부는 인구정책을 통한 지역균형, 주택 및 교육, 보건, 인프라 건설, 다문화 정책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 호주의 인구정책은 대부분 이민정책에 기반하고 있으며, 호주의 이민정책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단기 및 중기적 변화와 기술적 요구에 충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추진되어 왔음
- 이민정책은 숙련 노동자 공급, 인구 증가뿐 아니라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McDonald, 2018; 더퍼블릭뉴스, 2021.1.21.)
  - 만약 순 해외 유입인구가 없다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17년 15.4%에서 2051년 26.8%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그러나 순 해외 유입인구가 현재 평균인 연간 20만 명이 유지된다면 고령인구 비율은 20.5%에 불과하며, 2053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이 1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해외 유입인구를 통해 경제성장에 필요한 숙련 노동자들을 공급하고 있음. 해외 유입인구가 없다면 35세 이하 고용 노동자들의 수는 2016~2026년에 51만 8천명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현재 평균 수준인 20만 명의 순 해외 유입인구를 포함하면 42만 5천명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함. 이는 단기적으로 지방의 노동 부족을 채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McDonald, 2018)
-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출생율을 1.7~2.0을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효과는 이민정책의 확대, 임신부 지원, 효율적인 보육 시스템, 육아 휴직제도의 확대 적용, 사회 보장 급여 확대, 그리고 유아 교육에 대한 공공 지원 강화와 같은 정부 정책의 결과임

## 2. 인구감소 대응체계

### ● 정부협의체(COAG,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구성 및 운영<sup>24)</sup>

- 호주는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정부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회의를 통해 인구감소, 인구의 대도시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과 증가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함
- 정부협의체(COAG)는 1992년 폴 키팅 정부(노동당) 시절 호주 정부의 혁신과 정부 간 협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workhorse of the nation)로써 설립되었으며, 정부 간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함
- 정부협의체는 연방총리, 주지사(6명), 각 부처 장관, 호주 지방정부협의회(ALGA) 회장(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간 균형발전,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인구정책 집행을 위한 자원 마련 등을 논의함
- 정부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하위 12개의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음:
  - 연방재정관계협의회
  - 장애개혁협의회
  - 교통 및 인프라 협의회
  - 에너지협의회
  - 기술위원회
  - 법무장관협의회
  - 교육위원회
  - 보건위원회
  - 격차 해소에 관한 공동 협의회
  - 원주민 문제 협의회
  - 호주 데이터 및 디지털 협의회
  - 여성안전협의회
- 정부협의체 회의는 연방-주/준주 정부 대표들이 직접 만나 회의를 가지면서 주요 안건을 논의해옴(윤성현, 2018: 35).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수상(the Prime Minister)의 회의 개최 계획 발표에 따라 수도인 캔버라, 멜버른, 시드니 등에서 개최함으로써 지역균형적 접근을 취하고자 하였음
- 예를 들어, John Howard 수상의 경우 재임 11년 동안 14번 회의를 개최한데 반해, Kevin Rudd 수상은 4년동안 9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음(NSW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2013: 6)
- 기존의 내각 체계(Cabinet)는 총리를 중심으로 집중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데 반해, 정부협의체는 소속 정당,

24) COAG 홈페이지(<https://webarchive.nla.gov.au/awa/20210121023257/https://www.coag.gov.au/>)를 참조하여 작성

정치철학,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의 측면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준주지사들이 함께 결정을 내리고, 정책집행 시 재원을 분담하는 거버넌스 체계임. 이는 합의에 기반한 정부 간 협력체계로의 전환뿐 아니라 정부 혁신을 의미함(NSW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2013: 5)

- 정부협의체에서 논의된 아젠다를 중심으로 호주 전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이 수립되며, 정부협의체 구성원들은 각 지방정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정책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건전한 재원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함

### ● 전시 내각에 준하는 국가내각회의(National Cabinet) 구성 및 운영<sup>25)</sup>

- **정부협의체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 간 실시간·탄력적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20년 5월 29일부터 국가내각회의의 형태로 대체되어 운영되고 있음**
  - 정부협의체는 연간 1~2회 정기회의를 진행했으나 국가내각회의는 코로나19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간 최소 4회 개최함
  - 국가내각회의는 데이터와 디지털, 주택과 노숙자 문제, 장애 개선, 기술과 인력, 교육, 기반시설과 교통,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 계획, 보건, 치안, 여성 및 여성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논의함
  - 국가내각회의에는 연방총리와 주지사만이 기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며,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은 필요시에만 참여하는 구성으로 변경됨. 즉, 국가내각회의의 체제에서는 지방정부의 참여가 다소 제한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구성한 전국내각을 중심으로 한 전국연방개혁위원회(National Federation Reform Council)가 설립되었으며, 기존 정부협의체가 다루었던 주요 의제 중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전국연방개혁위원회에서 협의 및 추진함(2020.5.29.)
    - 전국연방개혁위원회는 기존 연방재정관계협의회(CFFR, Council on Federal Financial Relations) 소속 재무장관들과 호주 지방정부협의회(ALGA,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소속 지자체장들로 구성됨

### ● 인구센터 설립 운영<sup>26)</sup>

- **호주 정부는 인구정책의 다각적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는 통계와 데이터 관리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인구 관련 데이터 관리, 지역별·세대별 인구 통계 및 예측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구센터를 설립함**
- **인구센터는 호주 인구변화를 분석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인구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2019년 설립되었음**
  - 인구센터는 인구 관련 데이터 관리 및 연구, 인구변화 예측, 연방-주-준주-지방정부의 인구계획 수립 및 협력 추진을 담당하는 재무부 소속 연방정부 기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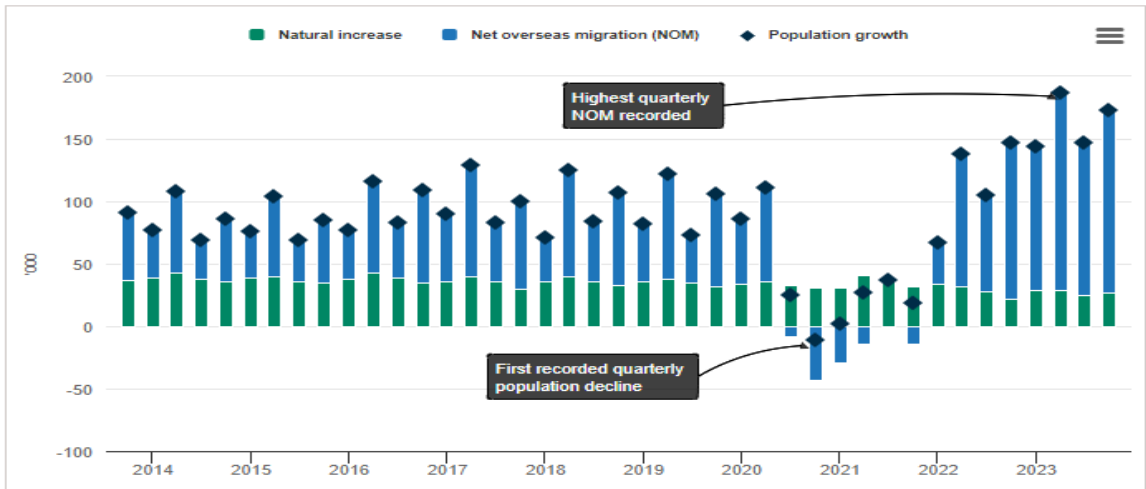
25) Parliament of Australia 홈페이지([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BriefingBook47p/NationalCabinet](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BriefingBook47p/NationalCabinet))를 참조하여 작성

26) Centre for Population 홈페이지(<https://population.gov.au/about>)를 참조하여 작성

- 인구센터는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이 제공하는 국가, 주,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인구통계를 활용하여 출산율, 사망률, 주·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인구변화, 미래 인구추계, 주요 변화요인을 분석하여 매달 ‘National, State and Territory Population’을 발표함

그림 21 | 호주 인구센터의 분기별 인구추계(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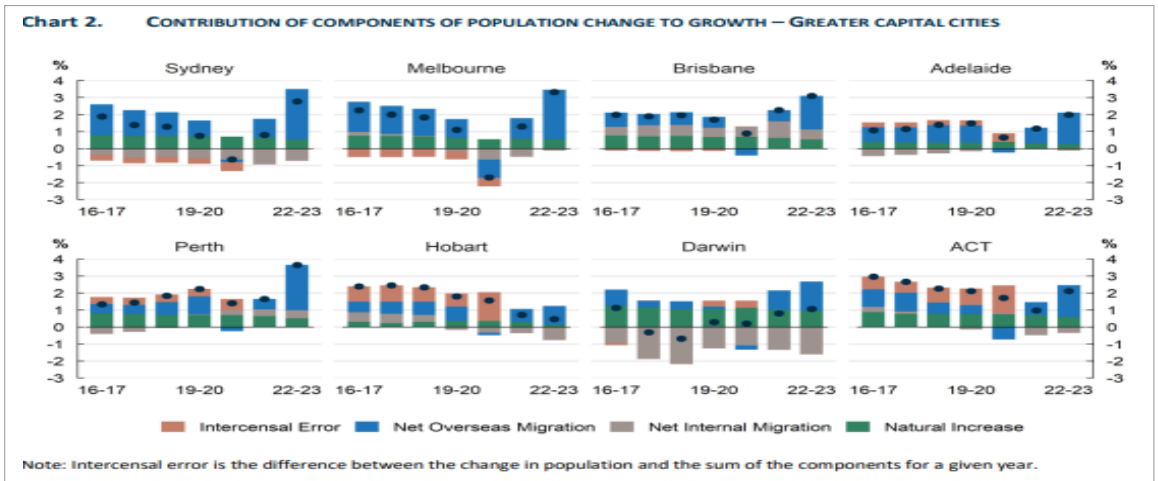
Chart 1. Quarterly national population growth and components



출처 : 호주 인구센터. (2023. 9.). National, State and Territory Population, September 2023, p.1. <https://population.gov.au/sites/population.gov.au/files/2024-03/econote-nst-population-sep-2023.pdf> (검색일: 2024.4.4.)

- 매년 Regional Population 보고서 발간을 통해 주요 도시별, 주 정부별 인구변화의 추이와 변화요인을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이민정책, 출산장려정책, 고용정책, 교육정책 등 정책수립에 기여함

| 그림 22 | 호주 인구센터의 연간 지역별 인구추계(예시)



출처 : 호주 인구센터. (2024). Regional Population, 2022-23, p.2.

<https://population.gov.au/sites/population.gov.au/files/2024-03/econote-regional-population-2022-23.pdf> (검색일: 2024.4.4.)

- 인구센터는 재무부 주관 인구포럼에서 데이터와 예측(Data & Forecasting) 워킹 그룹을 운영하며, 주정부와 지역 정부가 인구정책을 수립할 때에 컨설팅을 제공함

## ● 지방정부협의회<sup>27)</sup>

- 지방정부협의회는 호주의 6개 주와 준주 소속 537개 지방정부로 구성되었으며, 호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1947년 설립되었음

- 2019년 2월 지방정부협의회는 ‘인구와 변화 관리-지방정부의 관점: 재무부 주관 인구포럼에의 기여(Managing Population and Change – Local Government Perspective: Contribution to the Treasurer’s Forum on Population)’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본 보고서에서는 농촌 지역의 살기 좋은 삶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연방정부가 지원할 것을 촉구함:
  - 이주와 출산율 개선을 통한 인구 증가
  -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등 교육과 다양한 취업 기회 제공
  - 지역 및 사회 필수 인프라(예: 디지털, 물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
  - 장기 거주가 가능한 저렴한 주택의 공급
  - 대중 교통
  - 주요 공공서비스 기관에의 접근성
  - 자연친화적 관광과 농업을 포함한 경제 다각화 및 경제적 기회의 활용
  - 자연환경에의 접근성 강화와 지역유산 보호/자본화
- 본 보고서는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와 주정부, 인근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인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의 관리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27)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19)를 참조하여 작성

### 3. 인구감소 대응정책 및 우수사례

#### ● 정부협의체의 “인구포럼”을 통한 “국가인구 및 계획 프레임워크”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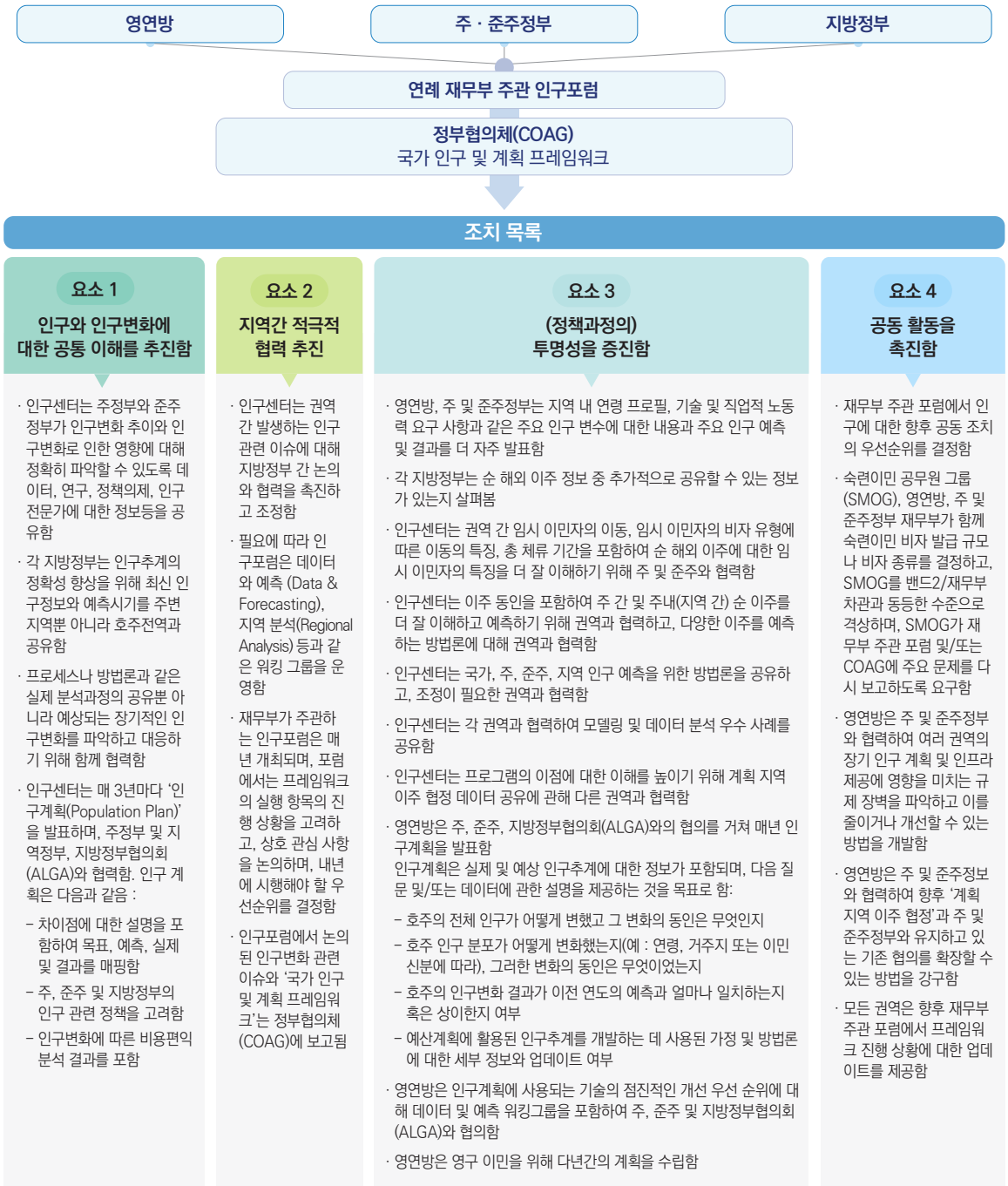
- 정부협의회는 전 정부차원에서 참여하는 인구포럼(Treasurers' Forum on Population)을 개최하였으며, 인구 포럼은 호주 인구정책과 지속적 재원마련을 위한 연방재정관계협의회(CFFR)의 일환으로서 운영됨
- 인구포럼에는 지방정부협의회(ALGA)와 각 지역정부 및 연방정부 재무장관이 참여함
- 인구포럼은 매년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역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며,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협의체는 ‘국가인구 및 계획 프레임워크(National Population and Planning Framework)’를 제시함
- 국가인구 및 계획 프레임워크는 연방, 주, 지역, 지방정부의 인구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공유함으로써 인구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향상하고 각 정부 관할권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안되었음

#### ● “국가인구 및 계획 프레임워크”의 중요 요소와 정책과제

- 정부협의체는 2019년 8월 9일 ‘국가인구 및 계획 프레임워크(National Population and Planning Framework)’를 발표하였음
- 국가인구 및 계획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비전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 호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 경제발전을 지원한다
  -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발전을 추진한다
  - 지역사회의 결속을 장려한다
- 국가인구 및 계획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인구정책 수립 및 관리를 위한 중요 요소는 다음과 같음(Centre for Population, 2020: 3~7)
  - [요소 1] 인구와 인구변화에 대한 공통 이해를 추진함
    - 인구센터(Centre for Population)는 주정부와 지역정부가 인구변화 추이와 인구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연구, 정책의제, 인구 전문가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
    - 각 지역정부는 인구추계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최신 인구정보를 주변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유함
    - 인구센터는 주정부 및 지역정부, 지방정부협의회(ALGA)와의 협업을 통해 매 3년마다 ‘인구계획(Population Plan)’을 발표함. 인구계획에는 인구분포도, 인구추이, 주정부 및 지역정부의 인구 관련 정책, 인구변화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포함
  - [요소 2] 지역을 넘어선 적극적 협력을 추진함
    - 인구센터는 권역 간 발생하는 인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정부 간 논의와 협력을 촉진하고 조정함
    - 재무부가 주관하는 인구포럼은 매년 개최되며 데이터와 예측(Data & Forecasting), 지역 분석 등 분과별 워킹 그룹을 운영함

- 인구포럼에서 논의된 인구변화 관련 이슈와 차년도 인구계획안은 정부협의체(COAG)에 보고됨
- [요소 3]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증진함
  -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는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예: 지역 내 연령 분포, 인력, 기술 수준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발표함
  - 인구센터는 권역별 해외 유입 인구, 지역 간 이동 인구, 해외 이민자의 비자 유형, 체류 기간 등을 조사하고 발표함
  - 인구센터는 인구추계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과학적 방법론을 연구하고 예측모형과 데이터 분석 결과, 지역 내 인구증가 우수 사례를 발표함
  - 연방정부는 주정부, 지역정부, 지방정부협의회(ALGA)와의 논의를 거쳐 매년 인구통계를 발표함. 인구통계는 호주 인구변화 추이, 인구변화의 요인(예: 연령, 지역, 이민 여부 등), 인구변화의 영향력, 과거 인구예측치와 실제 인구와의 비교, 인구변화에 따른 예산 마련 방안 등을 포함함
  - 연방정부는 인구포럼 내 데이터와 예측(Data & Forecasting) 워킹 그룹을 통해 주정부, 지역정부, 지방정부협의회 등이 인구 정책 수립 시 컨설팅을 제공함
- [요소 4] (다양한 주체간) 공동 활동을 촉진함
  - 인구포럼에서 인구증가를 위해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가 수행해야 할 공동 활동을 결정함
  - 모든 지역정부는 관할권 내에서 발생한 최신 인구변화의 정보를 포럼에서 발표 및 공유함
- **국가인구 및 계획 프레임워크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등 각 정부별 추진해야 할 업무와 협업 업무를 단계별로 제시함**
  - 초기: 각 정부별 인구변화 조사와 통계를 수집
  - 중기: 개별 정부가 수집한 정보와 데이터 공유 및 정부 간 정책과정의 공동 추진
  - 장기: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인프라, 서비스 등과 관련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인구관리 및 계획의 일관성 유지와 투명성 증진
- **각 주정부, 지방정부가 인구정책 집행 시 소요되는 자원 추정 및 자원 마련 방안,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사항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그림 23 | 호주 정부협의체(COAG)가 제시한 인구포럼 추진체계와 인구정책의 주요 내용



출처 : Centre for Population. (2020). National Population and Planning Framework, p.9. <https://population.gov.au/sites/population.gov.au/files/2021-09/framework.pdf> (검색일: 2024.4.8.)

## ● “국가인구 및 계획 프레임워크”의 세부 정책 및 정부별 연계방안

- 국가인구 및 계획 프레임워크는 인구증가를 위해 이민과 기술 도입, 인프라 구축, 주택문제 해결, 데이터, 통계 및 (인구변화) 예측 등 4가지 유형의 세부 정책으로 구성됨
  - 또한 각 세부 정책별로 연방정부, 지방정부 및 각 부처의 부서가 추진해야 하는 업무와 세부 정책과제 간 연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협업체계를 구축
  - 이러한 인구 정책추진을 통해 호주 정부는 인구증가는 단순히 출산율 증가와 이민을 통한 인구유입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발전, 경제발전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sup>28)</sup>

| 그림 24 | 호주 정부협업체가 제시한 인구정책 계획안(예시)

|             | 이민과 기술                                                                                                   | 기반시설                                                                                                                 | 주택                                                                                                                     | 데이터, 통계 및 예측                                                                                                                                                                                                                                                                                                                                                                                                                                            |
|-------------|----------------------------------------------------------------------------------------------------------|----------------------------------------------------------------------------------------------------------------------|------------------------------------------------------------------------------------------------------------------------|---------------------------------------------------------------------------------------------------------------------------------------------------------------------------------------------------------------------------------------------------------------------------------------------------------------------------------------------------------------------------------------------------------------------------------------------------------|
| 장관급 참여      | 기술이민에 관한 장관급 자문위원회 (MACSM)                                                                               | 정부협업체(COAG) 운송 및 기반시설협의회                                                                                             |                                                                                                                        | 호주 디지털 협의회 (Australian Digital Council)<br>호주의 디지털 역량 개발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함.<br>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협업을 추진함                                                                                                                                                                                                                                                                                                                                                          |
| 담당 기관 및 부서  | 내무부                                                                                                      | 기반시설, 교통, 도시 및 지역 개발부                                                                                                | 사회복지 서비스와 재무부                                                                                                          | 호주 통계청<br>연방 총리와 내각 호주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br>정부 데이터 자산의 활용 관리<br>연방 총리와 내각 국가데이터위원회<br>더 간단한 데이터 공유 및 릴리스 프레임워크 구현                                                                                                                                                                                                                                                                                                                                             |
| 참여 구조       | 숙련이민 공무원그룹 (SMOG)<br>계획 논의, 정보 공유, 기술 이민 관련 문제를 모색하는 포럼<br><br>고위공무원 합의결과 그룹<br>현안 관련 합의에 관한 정보교류와 협의 포럼 | 기반시설 실무그룹 (IWG)<br>기반시설 투자, 조달 및 자금에 대한 혁신을 추진<br><br>교통 및 기반시설 고위공무원위원회<br>위원회는 교통 및 기반시설 협의회의 전략적 의제를 개발, 조정 및 진행함 | 주택 및 노숙자 고위공무원 네트워크(HHSON)<br><br>재무부차관(DHOTS)<br><br>주택 및 노숙자 데이터 실무그룹<br>주택 및 노숙자 데이터 개선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주 및 기타 구성원을 지원함 | 호주 통계자문위원회 (ASAC)<br>통계서비스에 관한 장관 및 통계청 주요 자문 기관. 추정부, 기업 및 학술 회원을 대표함<br><br>AUSDATA 포럼<br>데이터에 관한 연연방, 주 및 준주정부 포럼. 기술, 사회용인행위, 사회적 투자, 분석 및 정책을 포함한 작업을 지원함<br><br>양자협의<br>NDC는 주지사 및 부처와 함께 진행 중인 주정부 협의에 대해 조인함<br><br>국가통계포럼(SSF)<br>기술적 우선순위를 논의하기 위해 통계청 고위 구성원과 주 및 준주정부가 매 2년마다 정기회의 개최<br><br>ADC 고위공무원단<br>올라적인 데이터 사용, 사회의 기대, 기술적 우수 사례, 업계 및 국제법에 대해 조인할 특정 주정부 대표하지 않음<br><br>영연방/주(및 뉴질랜드) 인구추계기술 워크숍 (PETV)<br>호주와 뉴질랜드 인구 워크숍(ANZPW) |
| 정책과정을 통한 참여 | 연간이주프로그램 매년 여당대표들이 참여<br><br>국가숙련리스트 주정부의 참여와 제출                                                         | 국가 파트너십 협약<br><br>개별 거래 및 투자                                                                                         | 국가 주택 및 노숙자 협약<br><br>주·준주정부 주택 및 노숙자 전략                                                                               | 인구 예측<br>5년차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주정부 참여                                                                                                                                                                                                                                                                                                                                                                                                                          |

출처 : Centre for Population. (2020). National Population and Planning Framework, p.8. <https://population.gov.au/sites/population.gov.au/files/2021-09/framework.pdf> (검색일: 2024.4.8.)

28) <https://population.gov.au/sites/population.gov.au/files/2021-09/framework.pdf>

## ● (우수 사례) New South Wales주의 인구증가 사례<sup>29)</sup>

- 뉴사우스웨일즈(NSW) 주는 8개의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중 서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지난 20년 간 인구증가가 발생함

| 그림 25 | New South Wales주의 최근 20년간 인구변화(2001~2022년)

**Table 1. Population by NSW region ('000s)**

| Region                    | 2001 | 2006 | 2011 | 2016 | 2021 | 2022 | 20 year change (2001–21) |
|---------------------------|------|------|------|------|------|------|--------------------------|
| <b>Coastal</b>            |      |      |      |      |      |      |                          |
| Hunter*                   | 244  | 256  | 275  | 291  | 305  | 308  | 125%                     |
| Illawarra Shoalhaven*     | 69   | 72   | 76   | 81   | 85   | 86   | 124%                     |
| North Coast               | 452  | 474  | 498  | 517  | 536  | 546  | 119%                     |
| South East and Tablelands | 281  | 295  | 312  | 325  | 328  | 330  | 117%                     |
| <b>Inland</b>             |      |      |      |      |      |      |                          |
| Central West and Orana    | 255  | 253  | 264  | 272  | 279  | 280  | 109%                     |
| Riverina Murray           | 231  | 232  | 237  | 244  | 251  | 258  | 109%                     |
| New England North West    | 200  | 194  | 200  | 202  | 202  | 202  | 101%                     |
| Far West                  | 38   | 35   | 34   | 32   | 28   | 29   | 78%                      |

Source:<sup>3</sup> Notes: \*excluding Newcastle and Lake Macquarie in the Hunter, and Kiama, Wollongong and Shellharbour in Illawarra Shoalhaven.

출처 : Parliament of New South Wales. (2023). Rural and Regional Development in NSW in the Aftermath of COVID-19,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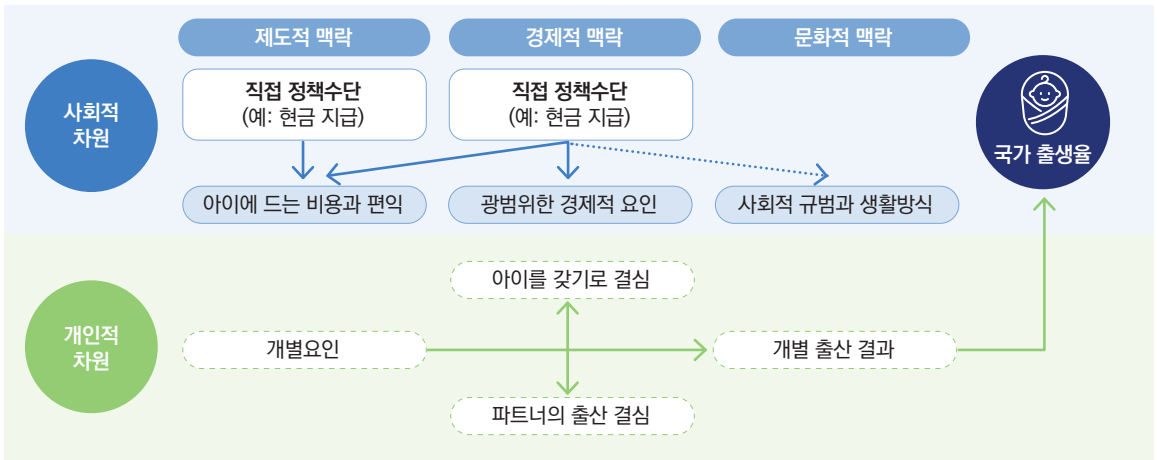
<https://www.parliament.nsw.gov.au/researchpapers/Documents/Rural-and-regional-development-in-NSW-in-the-aftermath-of-COVID-19.pdf> (검색일: 2024.4.11.)

- 주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인구증가는 정책변화에 기인하였는데, 주택가격의 급등에 따라 호주 내 이동이 발생하였으며 NSW주의 주택정책이 인구의 사회적 이동의 유인이 되었음
  - NSW주 정부는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위해 '지역 주택 테스크포스(Regional Housing Taskforce)'를 구성하고, 인구유입을 위한 주택정책의 변화 방향을 도출함
    - 지역 주택 테스크포스는 2021년 6월 NSW주 정부에 인구유입을 위한 주택정책 세부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NSW주 정부는 다음 해인 2022년 8월 향후 10년간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기획하는 정책을 발표함
- NSW주 정부는 주택정책뿐 아니라 이민정책의 확대, 여성 일자리 확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및 돌봄서비스 확대 정책을 통해 인구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였음
  - 인구센터에서 발표한 보고서(Impacts of Policies on Fertility Rates)에 따르면 유급 육아휴직제도와 자녀 출생에 따른 세금감면제도는 출생률을 약 5%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29) Parliament of New South Wales. (2023)를 참조하여 작성

- NSW주 사례는 정책변화에 따른 인구증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정책변화를 위해서는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줌

그림 26 |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출처 : 호주 인구센터. (2022). Impacts of Policies on Fertility Rates, p.5.

[https://population.gov.au/sites/population.gov.au/files/2022-03/ANU\\_Impacts-of-Policies-on-Fertility-Rates-Overview.pdf](https://population.gov.au/sites/population.gov.au/files/2022-03/ANU_Impacts-of-Policies-on-Fertility-Rates-Overview.pdf) (검색일: 2024.4.11.)



---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부혁신 해외 사례

일본과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 종합비교

| 표 8 | 국가별 인구감소 대응 체계 및 특징 비교

|       | 우리나라                                                                                                                                                                                                                                                                                                                              | 일본                                                                                                                                                                                                                                                                                                                                        | 호주                                                                                                                                                                                                                                                                                                                                            |
|-------|-----------------------------------------------------------------------------------------------------------------------------------------------------------------------------------------------------------------------------------------------------------------------------------------------------------------------------------|-------------------------------------------------------------------------------------------------------------------------------------------------------------------------------------------------------------------------------------------------------------------------------------------------------------------------------------------|-----------------------------------------------------------------------------------------------------------------------------------------------------------------------------------------------------------------------------------------------------------------------------------------------------------------------------------------------|
| 대응 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트롤 타워로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부처별 분절적으로 대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각부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일원적 대응체계로 변화 추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포럼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대응체계</li> </ul>                                                                                                                                                                                                                                                                    |
| 대응 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li> <li>• 행정안전부</li> <li>• 여성가족부</li> <li>• 보건복지부</li> <li>• 국토교통부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각부-후생노동청-문부과학청 3각 체제(현)</li> <li>• 선택하는 미래위원회 설립 (2014년 1월)</li> <li>• 아동가정청 설립 예정 (2024년 4월)</li> <li>•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협의체(COAG)</li> <li>• 재무부 소속 인구센터(Centre for Population) 설립</li> </ul>                                                                                                                                                                                                                              |
| 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li> <li>• 출산, 보육, 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li> <li>• 지방소멸방지기금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지원</li> <li>• 아동과 노인 대상 보험 제공</li> <li>• 기반시설 구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총괄</li> <li>• 건강 · 의료, 아동 · 육아 서비스 제공</li> <li>• 교육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장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 추진, 정기회의 개최, 예산 마련</li> <li>• 인구변화 관련 데이터와 통계 관리</li> <li>• 인구추계 및 인구변화 영향요인 분석</li> <li>• 국가인구와 계획 프레임워크 등 인구 정책 수립 지원</li> </ul>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인구감소 문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li> <li>• 인구문제 대응체계의 분절화로 정책 대상, 정책내용 및 집행 등이 각 부처 별로 한정적 범위에서 추진</li> <li>• 인구조사, 인구추계, 생활인구 개념 등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서 활용되는 인구 데이터가 부처별로 상이</li> <li>• 인구정책의 범위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협업관점의 확장적 재검토 필요. 저출생 정책에서 교육, 고용, 정주여건, 이민 등으로 연계 및 확장 논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하는 내각부가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총괄을 담당</li> <li>•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과 법령에서 총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의무와 권한을 명확하게 설정</li> <li>• 아동가정청 신설을 통해 인구정책·가족정책·복지정책의 일원화 추진</li> <li>•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거버넌스보다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비영리단체, 기업과의 연계에 중점</li> <li>• 문제해결 조직으로서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 조직 활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지방 간 거버넌스 구축과 인구 관련 데이터 관리·분석을 통한 과학적 정책 수립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노력</li> <li>• 연방총리, 주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함께 모여 인구감소 문제를 논의하는 인구포럼 개최</li> <li>• 인구포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정책대안 마련</li> <li>• 인구센터는 인구변화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제공</li> <li>• 연방, 주, 지방 정부, 각부처 및 부서별로 세부 정책에 대한 연계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li> </ul> |

출처 : 저자 작성

## 2. 정책적 시사점

### ● 정책난제로서 인구문제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일본의 아동가정청, 호주의 정부협의체 등과 같이 국민의 삶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대응 및 총괄하고 범정부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함
- 우리의 경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로서 설계되었으나 예산 및 집행 기능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통합적 문제해결 대응체계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
  -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생활인구가 결국 정주민으로 전환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하며(이삼수, 2024: 7), 지역과 공간의 관점에서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함
  - 또한 각 부처별 인구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사업 중복성 검토를 통한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하며, 장기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체계 상 특정 중앙행정기관이 컨트롤 타워로서 정책 간 연계를 추진하기에는 권한, 자원, 인력 측면의 한계가 존재함
  - 현 단계에서 고려해 볼 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강화를 통해 인구감소 관련 정책 담당 기관 간 조정과 예산 배분, 체계적 정책설계 및 연계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이 가장 손쉬운 방안으로 제시됨
  -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인구부에 대한 신설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만일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구부의 권한, 협업추진 역량, 다른 부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조직 체계로의 작동이 가능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
  - 일본의 경우,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관련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고 있으며, 내각부를 중심으로 아동가정청(아동·청소년 대상 정책, 내각부 소속), 선택하는 미래위원회 설립, 부처 간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 인구 정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연계와 협업체계 구축 필요

- 자연적 관점의 출생율 증가와 사회적 관점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부처별 사업의 나열이 아니라 정책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정책대상, 정책목적, 정책수단을 교차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래사업은 6가지의 시책이 존재하는데 내용상 부처 간 연계가 가능한 정책이지만 실제 연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별 중복되는 정책이 다수 존재함
  - 현재 대응체계 수준에서는 이러한 정책연계와 교차적 검토의 역할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컨트롤 타워로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각 부처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점검·검토하고, 유사한 정책목적을 띠고 있는 경우 정책통합을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I 그림 27 I 인구문제 대응 및 협업 체계(안)



출처 : 저자 작성

### ● 정책난제로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간 수평적-수직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소멸, 노동력 감소, 산업 변화, 경제규모 감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하므로 정부 부처 간 협업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호주는 연방총리, 주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함께 정부협의체(COAG)를 설립하여 인구감소 문제를 정부 간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정부협의체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연방정부 차원의 계획 및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지역별 주요 이슈 공유와 대응방안을 논의함
  - 우리의 경우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는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 존재:
    -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타운 정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에 주거, 문화, 복지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이를 위해 8개 부처(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지역 정책에 참여하고 있음
    - 관계부처 통합 공모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의 연계, 돌봄·일자리·문화 등 생활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이고 빠르게 정책집행이 가능하고 주민은 주거, 일자리, 생활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호주의 경우 정책난제로서 인구문제를 다루기 위한 “인구포럼”을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등 참여적 거버넌스 수단을 적극 활용함
  - 인구포럼은 매년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역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협의체는 ‘국가인구 및 계획 프레임워크’를 제시함

## ●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난제 해결 대안 및 컨설팅 제공 필요

-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 문제 관련 정책적 해결책 제시와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호주의 경우 인구센터(Centre for Population)가 중심이 되어 데이터와 예측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인구포럼에서 정책의제와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내는 역할을 수행함
  - 인구센터는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호주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에 맞는 인구정책을 수립할 때 컨설팅을 제공함
- 우리의 경우 중앙정부중심의 천편일률적인 인구정책이라는 비판적 논의가 존재함. 향후 지역 상황과 인구 데이터에 걸맞는 지역 중심 맞춤형 인구정책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 창출과 집행이 필요
  -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에 대한 교육과 적극 활용에 대한 논의 필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열린정책랩 방식의 워킹그룹 운영을 정부혁신 수단으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2024년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인구감소·지방소멸, 칸막이 해소 및 협업, 기후위기 등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정책의제와 대안을 도출할 예정
  - 중앙정부의 정책부처가 중심이 되어서 지방정부의 인구문제 정책에 대한 대안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컨설팅이나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여 지방정부의 문제해결 역량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

## ● 인구 관련 데이터와 통계의 수집·공개·관리·활용을 통한 과학적 정책결정 필요

- 인구감소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정확한 인구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인구추계가 필요함
  - 인구추계는 인구학적·사회학적 환경 변화에 따른 출산력과 이동력 등을 예측하는데 활용됨. 국토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다수의 공간계획에서는 장래인구를 예측하여 미래 지역의 규모, 비전, 전략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므로 시군구 이하 세밀한 단위의 인구추계가 필요함(이보경, 2019: 6)

- 각 시·도지자체에서는 시·군단위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통계청 공표 장래인구추계와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 향후 인구감소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세밀한 소지역 단위의 인구전망과 추계가 필요함
-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기본이 되는 인구추계를 위해서는 추계방법의 재정립과 추계단위 설정이 필요하며, 추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예측과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호주는 인구 데이터와 통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재무부 소속 인구센터(Centre for Population)를 설립하였음
  - 인구센터는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이 제공하는 국가, 주,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인구통계를 활용하여 출산율, 사망률, 주·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인구변화, 미래 인구추계, 주요 변화요인을 분석하여 매달 'National, State and Territory Population', 매년 'Regional Population' 보고서를 발간함. 정확한 통계와 인구추계를 제공함으로써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이민, 주택, 출산장려, 고용, 교육 등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각 시·도지자체와 통계청이 인구추계를 하고 있으나 일원화된 방법과 단위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정책수립 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99개의 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 주민등록인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비교한 결과, 2015년도 계획인구 대비 주민등록인구는 지방자치단체 평균 81.2%에 그친데 반해, 장래인구추계 대비 계획인구는 2025년 128.4%, 2030년 131.2%로 점점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소단위 인구추정에 기반한 인구추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시 인구 과다추정 이슈가 발생하고 있음(민성희 외, 2018: 7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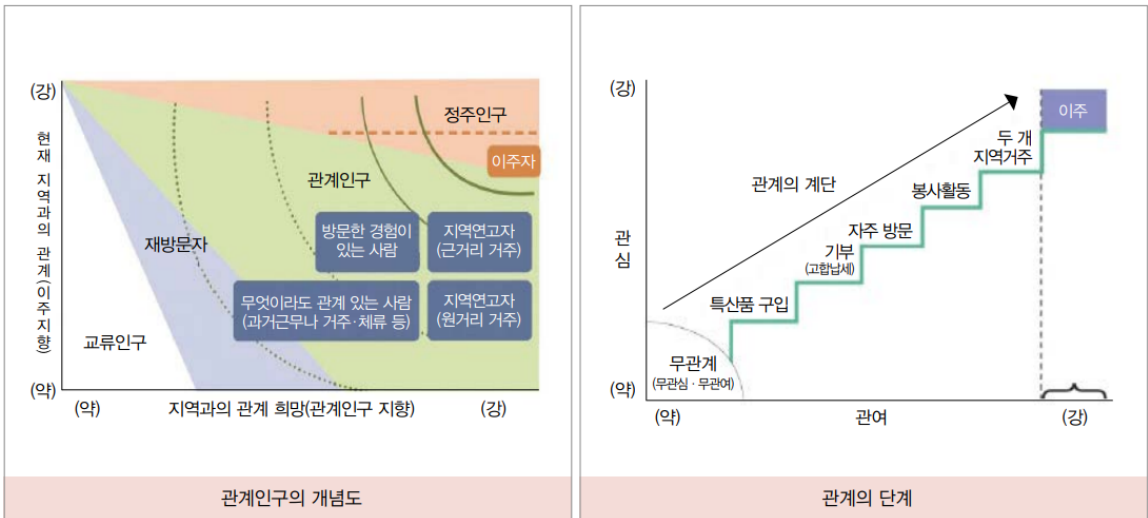
## ● 부처별 상이한 인구 개념과 측정방법에 대한 통합 필요

- **부처별 상이한 인구의 개념과 측정방법으로 인해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이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음. 인구 개념과 측정방법에 대한 부처 간 합의와 통합이 필요함**
-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가 제시하고 있는 '생활인구'의 개념은 인구증가가 아닌 일시적 이동에 따른 인구 재배치의 개념임. 따라서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 저출생의 문제는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어 극복이 안되는 한계가 존재함**
  -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제2항에서 정의하는 생활인구란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임. 즉, 우리나라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와 월 1회 이상 3시간 이상 머문 체류인구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생활인구는 ①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②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③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속함

● 일본의 경우는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2018년에 도입하였는데, 관계인구란 ‘이주나 관광이 아니라, 일상 생활권과 통근권 이외에 특정 지역과 계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정의됨

- 일본은 관계인구는 단순 방문과 체류에서 더 나아가 이주의 전 단계로 인식하고 있음
- 관계의 단계는 ‘무관심 → 해당 지역 특산물 구입 → 기부(고향납세) → 방문 → 봉사 → 두 개 지역 거주 → 이주’의 순서로 발전

그림 28 |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과 형성단계



출처: 차미숙, (2021: 100).

● 향후 생활인구 등을 포함한 부처별 대상으로서의 인구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개념별 측정방법을 통일하고 통합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노력 필요

- 아래 표는 다각화된 인구 개념을 유형화하고 정리한 내용으로 인구 유형에 따른 정부부처와 인구정책의 확장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음

표 9 | 생활인구 특성별 확대 방안

| 구분          | 관계인구                               |                                |                                          |                     |                                        |
|-------------|------------------------------------|--------------------------------|------------------------------------------|---------------------|----------------------------------------|
|             | 생활인구                               |                                |                                          |                     |                                        |
|             | 등록인구                               |                                | 체류인구                                     | 방문 인구               | 비방문인구                                  |
|             | 주민등록인구                             | 외국인인구                          |                                          |                     |                                        |
| 인구유형        | • 주민등록인구                           | • 외국인등록인구<br>• 재외동포 국내<br>거소인구 | • 정기적인 체류 및 교류<br>인구                     | • 단순 방문             | • 지역과 관계를 맺고<br>지역문제 해결에 도움<br>을 주는 인구 |
| 목적 및<br>목적지 | • 30일 이상 거주목<br>적으로 등록             | • 외국인 등록                       | • 통근, 통학, 관광, 휴양,<br>업무, 정기적 교류 등        | • 단순 관광,<br>휴양 등    | • 고향납세 등                               |
| 기간/빈도       | • 30일 이상                           | • 30일 이상                       | • 월 1회 3시간 이상 체류<br>(30일 이내)             | • 월 1회 3시간<br>미만 체류 | • 미방문                                  |
| 방문여부        | • 거주                               |                                | • 방문                                     |                     | • 비방문                                  |
| 정책방향        | •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정책                   |                                |                                          |                     |                                        |
| 관련 정책       | • 지역활력타운, 복합공간 조성 등                |                                | • 2지역 거주,<br>워크이션 등                      | • 관광인프라<br>구축 등     | • 고향사랑기부제 등                            |
| 관련 부처       |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br>부, 행정안전부 |                                |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관광부,<br>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                     | • 행정안전부                                |

출처 : 안소현 외(2022: 24-39) 및 이삼수 외(2024: 12)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 이상 일본과 호주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에 적용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정책 난제로서 인구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는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해외에서 인구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호주의 인구포럼과 수평적-수직적 거버넌스 활용, 일본의 내각부 중심의 문제해결형 창생본부 조직과 통합형 일원화 방식으로 아동가정청 설립 등의 정부혁신 사례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 우리나라의 경우도 향후 인구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방식과 거버넌스 활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문헌

### 보고서, 학술논문, 단행본 등

- 교육데이터담당관. (2023). 2023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교육부.
- 국토교통부. (2022). 2022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구형수 · 배유진 · 윤세진 · 강동우 · 조성호. (2018).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동규 · 전주용 · 박세정 · 김화진 · 길은선. (2023). 지역산업과 고용. 한국고용정보원.
- 김신숙. (2024). 인구감소시기 강한 국방을 위한 병역제도 설계: 군인력 정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제안. 국방정책연구, 142(0), 7-32.
- 모리타 아케미. (2024). 일본의 임신기부터의 지역 조기 종합지원: 보건과 복지의 일체적 운영을 목표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개소 15주년 한부모가족 권익증진을 위한 국제 포럼 발표문.
- 민성희 · 김선희 · 이순자 · 김동근 · 차은혜 · 최성연 · 송정현. (2018).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 · 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시행계획.
- 성창훈. (2022). 인구감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KDI경제정보센터 칼럼. [https://eiec.kdi.re.kr/publish/columnView.do?cid=13981&sel\\_year=2022&sel\\_month=09](https://eiec.kdi.re.kr/publish/columnView.do?cid=13981&sel_year=2022&sel_month=09) (검색일: 2024.3.22.)
- 안소현 · 이순자 · 민성희 · 김민아 · 전봉경 · 강민석. (2022). 인구감소시대, 체류인구를 활용한 지역유형별 대응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 오수진. (2023). "출산 의향에 대한 정치적 요인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진성. (2023). "생산가능인구 1% 감소하면 GDP는 약 0.59% 줄어든다".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 윤성현. (2018).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호주-. 한국법제연구원.
- 이보경. (2019). 2040년 장래인구 분포 전망 연구: 소지역(500m 격자) 단위 코호트 요인법을 적용한 국토의 장래인구 분포 전망. 국토연구원.
- 이삼수 · 이미홍 · 윤병훈 · 권영환. (2024). 도시 및 지역계획의 실현성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개념의 적용방안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 이상호 · 이나경. (2023). 지방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한국고용정보원.
- 조성호. (2023). 최근 일본의 저출산 대응 방향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차미숙. (2024). 지방소멸, 왜 문제인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957053> (검색일: 2024.3.22.)
- 차미숙. (2021). 국토연구원 해외리포트-지역활력 증진과 '관계인구' 활용. 국토연구원.
- 하수정 · 이차희 · 심해민 · 이종표. (2022).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청년의 지역이동과 정착. 국토연구원.
- 한국경제연구원. (2023년 9월 2일자). 보도자료: 생산가능인구 1% 감소하면 GDP는 약 0.59% 줄어든다. <https://www.keri.org/forum/press-release/2023-05-18-saengsanganeungingu-1-gamsohamyeon-gdpneun-yag-0-59-juleodeunda> (검색일: 2024.3.29.)
- 행정안전부. (2024). 2024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 행정안전부. (2023). 보도자료: 대대적 조직개편으로 국정 성과 창출 박차.
- 후지요시 마사하루.(2016). 이토록 멋진 마을. 서울: 황소자리출판사.
-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19). Managing Population and Change: Local Government Perspective: Contribution to the Treasurer's Forum on Population. <https://alga.com.au/app/uploads/Local-Government-and-Population-Management-1.pdf> (검색일: 2024.3.27.)
- Centre for Population. (2024). Regional Population, 2022-23, p.2. <https://population.gov.au/sites/population.gov.au/files/2024-03/econote-regional-population-2022-23.pdf> (검색일: 2024.4.4.)
- Centre for Population. (2023. 9.). National, State and Territory Population, September 2023, p.1. <https://population.gov.au/sites/population.gov.au/files/2024-03/econote-nst-population-sep-2023.pdf> (검색일: 2024.4.4.)
- Centre for Population. (2022). Impacts of Policies on Fertility Rates, p.5. [https://population.gov.au/sites/population.gov.au/files/2022-03/ANU\\_Impacts-of-Policies-on-Fertility-Rates-Overview.pdf](https://population.gov.au/sites/population.gov.au/files/2022-03/ANU_Impacts-of-Policies-on-Fertility-Rates-Overview.pdf) (검색일: 2024.4.11.)
- Centre for Population. (2020). National Population and Planning Framework. <https://population.gov.au/sites/population.gov.au/>

files/2021-09/framework.pdf

- Centre for Population. (n.d.). About the Centre for Population. <https://population.gov.au/about> (검색일: 2024.4.4.)
- Centre for Population. (n.d.). Births, Australia. <https://www.abs.gov.au/statistics/people/population/births-australia/latest-release>. (검색일: 2024.4.2.)
-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n.d.). <https://webarchive.nla.gov.au/awa/20210121023257/https://www.coag.gov.au/>
- McDonald, Peter. (2018). "How Does Australia Manage Population Growth?" Pursuit, University of Melbourne. <https://pursuit.unimelb.edu.au/articles/how-does-australia-manage-population-growth> (검색일: 2024.3.20.)
- NSW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2013). COAG. <https://www.parliament.nsw.gov.au/researchpapers/Documents/coag/COAG.pdf>
- Parliament of Australia. (2019). Population Policy and the Budget.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FlagPost/2019/April/Population\\_Policy\\_and\\_the\\_Budget](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FlagPost/2019/April/Population_Policy_and_the_Budget). (검색일: 2024.4.11.)
- Parliament of Australia. (n.d.). Next Steps for National Cabinet.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BriefingBook47p/NationalCabinet](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BriefingBook47p/NationalCabinet) (검색일: 2024.3.27.)
- Parliament of New South Wales. (2023). Rural and Regional Development in NSW in the Aftermath of COVID-19, p.5. <https://www.parliament.nsw.gov.au/researchpapers/Documents/Rural-and-regional-development-in-NSW-in-the-aftermath-of-COVID-19.pdf> (검색일: 2024.4.11.)
- 内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2020). 第2期「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2020改訂版)。(역)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창생본부사무국내각부지방창생추진사무국. (2020). 제2기 마을·사람·일창생종합전략 (2020개정판).
- 森田明美. 2023. 当事者主体の伴走をめざして一自治体に求められる子育ての寄り添い型支援. 月刊公明 2023. 4: 10-16. (역) 모리타 아케미 2023. 당사자주체의 반주를 위해-자치체에 요구되는 보육의 자치체에 요구되는 보육과 함께하는 지원." 월간공명 2023. 4: 10-16.
- 溝口 洋. 2015. まち・ひと・しごと創生の経過と今後の展開・アカデミア 113: 38-43. (역) 미소구치 히로시. 2015. 마을·사람·일창생의 경과와 이후의 전개. 아카데미아 113: 38-43.
- 総務省. (n.d.). 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の組織体制.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341257.pdf](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341257.pdf) (역). 총무성. (n.d.). 마을·사람·일창생본부의 조직체제.

## 신문기사

- 경기일보. (2022년. 5월 31일자). "[현장, 그곳&] 농어촌과 도심 속 '애물단지' 빈집, 관리 일원화해야."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531580219> (검색일: 2024.3.21.)
- 경향신문. (2023년 4월 23일자) "'교대 나오면 임용 보장' 옛말...학령인구 감소에 초등 임용 합격률 50% 아래로."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4231517001#c2b> (검색일: 2024.3.12)
- 더퍼블릭뉴스. (2021.1.21.). "호주의 인구 및 지역 균형발전정책과 시사점." <https://www.thepub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83> (검색일: 2024.3.18.)
- 디지털타임스. (2024년 3월 12일자). "13.2만채 빈집... 해법 못찾는 정부."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31302100658080001&ref=jeadan](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31302100658080001&ref=jeadan) (검색일: 2024.3.21.)
- 매거진 한경. (2023년 12월 29일자). "한 시장이 만든 '육아 전문 도시', 나가레야마의 진화."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12197360b> (검색일: 2024.3.25.)
- 머니투데이. (2019년 12월 10일자). "20년 후 군입대 남성 15만명...국방력마저 위협하는 인구감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0611233848602> (검색일: 2024.4.2.)
- 서울뉴스통신. (2022년 10월 14일자). "여의도 44배... 방치된 빈집, 범죄발생 우려 높아." <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618927> (검색일: 2024.3.13.)
- 춘천사람들. (2023년 6월 20일자). "'교육도시 춘천' 진단 ② 교육도시 성공, 일본 후쿠이현 사례에서 배워야." <https://www.chunsa.kr/news/articleView.html?idxno=55613> (검색일: 2024.3.18.)

- 한국경제. (2019년 4월 8일자).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소비 줄어 경제활력 떨어져."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19040535361> (검색일: 2024.3.29.)
- 한국경제. (2022년 9월 6일자). "韓, 인구감소로 복합위기...의료·교육·국방·도시정책 모두 바꿔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90525731> (검색일: 2024.3.21.)
- 한국일보. (2022년 1월 11일자). "학교통폐합이 불러온 인구참사... 학교 재건하자 생기는 지역."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0711380000900> (검색일: 2024.3.18.)
- KBS뉴스. (2023년 2월 7일자). "“인구 감소로 파출소 통폐합 필요”...주민 반발 확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599710> (검색일: 2024.3.21.)

## 웹페이지

- 국가통계포털. (n.d.).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생산연령인구, 고령인구 등) / 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3&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3&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검색일: 2024.4.19)
- 국가통계 포털. (n.d.).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자연증가 등.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1&vw\\_cd=MT\\_ZTITLE&list\\_id=A21&scr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1&vw_cd=MT_ZTITLE&list_id=A21&scr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검색일: 2024.4.19.)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s://www.molit.go.kr>)
-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moe.go.kr/main.do?s=moe>)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List.do>)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mogef.go.kr/>)
- 일본 나가레야마시 홈페이지 (<https://www.city.nagareyama.chiba.jp/information/index.html>)
- 일본 내각부 선택하는 미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special/future/>)
- 일본 아동가정청 홈페이지 (<https://www.cfa.go.jp/resources/kodomo-mirai>)
- 일본 타사카고 스쿨 오모타카의 숲 분원 홈페이지 (<https://otakanomori.tksk.ed.jp/>)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betterfuture.go.kr/index.do>)
- 통계청 (<https://kostat.go.kr/ansk/>)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https://www.abs.gov.au/statistics/people/population/births-australia/latest-release>)
- Centre for Population (<https://population.gov.au/>)
- KDI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
- Parliament of Australia ( <https://www.aph.gov.au>)
- Parliament of New South Wales (<https://www.parliament.nsw.gov.au/>)
- Worldometer (<https://www.worldometers.info/world-population/japan-population/>)



● 본 KIPA 정부혁신 트렌드의 내용은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처 한국행정연구원 | 발행인 최상한 | 만든 사람들 우하린, 김정해, 송방현

통권 제1호 | 발행일 2024년 5월 |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행정연구원 | 전화 02-2007-0656

홈페이지 [www.kipa.re.kr](http://www.kipa.re.kr) | 디자인·편집 디자인크레파스 02-2267-0663



한국행정연구원